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경제안보 현안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경제안보 연구동향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중국: 희토류 수출,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광물 정책 시행 동향
- 미국: 한-미 무역 합의, 232조 구리 관세 부과,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동향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유아름 전문관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01

1. 개요
2. 주요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유형 및 사례
3. 전략적 배경과 목적
4. 평가 및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최용호 전문관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16

1. 배경
2. 미국-일본 무역 합의 주요 내용
3. 미국-EU 무역 합의 주요 내용
4. 한국-미국 무역 합의 주요 내용
5. 여타 국가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6. 분석 및 평가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이재원 선임전문관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4

1. 개요: 경제안보 관련 연구 보고서 검토 필요성
2. 경제안보의 정의와 범위
3.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중국: 희토류 수출,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광물 정책 시행 동향
- 미국: 한-미 무역 합의, 232조 구리 관세 부과,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동향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유아름 전문관

요약

- 미국은 최근 방산 수출과 핵심광물 확보를 전략 패키지로 연계하여 경제안보 외교 수단으로 활용
 - 우방국 및 전략적 중요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희토류, 갈륨 등 전략광물의 공급망을 현지에서 공동 구축 또는 투자하는 구조가 관찰
 - 군사·경제·외교를 통합한 하이브리드형 경제안보 외교로 진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 파트너국 내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
-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은 공동개발형, 자원대가형, 중재·진출형으로 분류 가능
 - (공동개발형: 사우디·UAE) 무기 수출과 동시에 핵심광물 생산기지 공동구축
 - (사우디) 1,4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美 광업기업과 사우디 내 희토류 생산 MOU 체결
 - (UAE) 美 방산기업과 UAE 내 갈륨 생산 계약 체결
 - (자원대가형: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대가로 핵심광물 수익권 및 개발권 확보
 - (중재·진출형: DR콩고-르완다) 안보 분쟁 중재로 美 기업의 아프리카 광물 시장 진출 발판 마련, 중국의 DR콩고 내 핵심광물 시장 영향력 견제
- 미국은 방산·핵심광물을 파트너국별 맞춤형으로 패키지화, 무기 판매를 핵심광물 공급망·투자·경제안보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하며 중국산 핵심광물을 대체하는 프렌드쇼어링 공급망 구축을 목표
 - 파트너국 입장에서도 자국 핵심광물 산업 육성, 미국과 전략적 연계강화 등을 목표로 미국과 방산·핵심광물 협력에 참여 중
- 한국도 K-방산 수출과 핵심광물 확보를 연계하는 전략 패키지 모델을 개발하고, 중견국 및 자원보유국과의 맞춤형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할 필요
 -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우리 주요 방산 수출국이자 핵심광물 보유국에 우리 기업 강점인 다운스트림(EV 배터리 등) 분야를 활용한 진출전략 개발 필요

1. 개요

- 미국은 최근 방산 수출과 핵심광물 확보를 연계한 경제안보 전략을 본격화하며, 이를 주요 외교 수단으로 활용 중
 - 과거 방산 수출과 자원확보가 각각 별도의 정책영역에서 추진되었으나, 최근 이를 연계함으로써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임이 관찰
 - 특히 우방국 및 전략적 중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기 수출과 동시에 희토류, 갈륨,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현지에서 공동 구축 또는 투자하는 구조가 관찰
 - 이러한 연계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영향력 확장을 넘어,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 및 방산 수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복합적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전략은 군사·경제·외교를 통합한 ‘하이브리드형 경제안보 외교’로 진화하고 있으며, 탈중국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 파트너국 내 영향력 확대라는 3대 목표를 동시에 추구
 - 방산 수출은 파트너국의 안보 필요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국의 기술과 무기를 확산시키는 수단이며, 핵심광물 확보는 에너지전환, 반도체·배터리 산업 육성 등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
 -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공급망 장악력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블록화 움직임으로 나타남
 - 방산과 핵심광물이라는 두 영역이 ‘경제안보’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결합되고 있으며, 각국과의 협력은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펀드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 중

[표 1] 미국의 국가별 방산·핵심광물 연계 교류 현황

국가	방산	핵심광물	주요 목표	특징
UAE	첨단 무기 판매 (헬기, F-16전투기 부품 등)	UAE 내 갈륨 생산	- 中·러 무기구매 견제 - 갈륨 공급망 확보	- 기존 석유 협력에서 핵심광물로 양자 간 협력 다변화
사우디	첨단 무기 판매 (C-130수송기, 레이더, 미사일 등)	사우디 내 희토류 생산	- 中·러 무기구매 견제 - 희토류 공급망 확보	- 美 기업과 협력해 중동 내 핵심광물 생산기반 구축
DR콩고-르완다	평화협정 중재	美 정부기업의 對아프리카 광물분야 투자협력 발판 마련 (코발트, 구리 등)	- 중국의 對아프리카 광물 장악력 축소 - 美투자기업 보호·진출확대	- 무장분쟁 완화와 핵심광물 확보를 결합한 군사·경제 패키지
우크라이나	첨단 무기 판매 (F-16전투기 부품 등)	미국의 우크라이나 광물자원 접근권 확보 (희토류 등)	- 러시아 억제 -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 군사원조 패키지에 광물 권역 투자 연계 - 핵심광물 수익을 무기 조달 자금으로전환

2. 주요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유형 및 사례

■ [공동개발형: 사우디, UAE] 무기 수출과 핵심광물 현지 생산기지 구축을 동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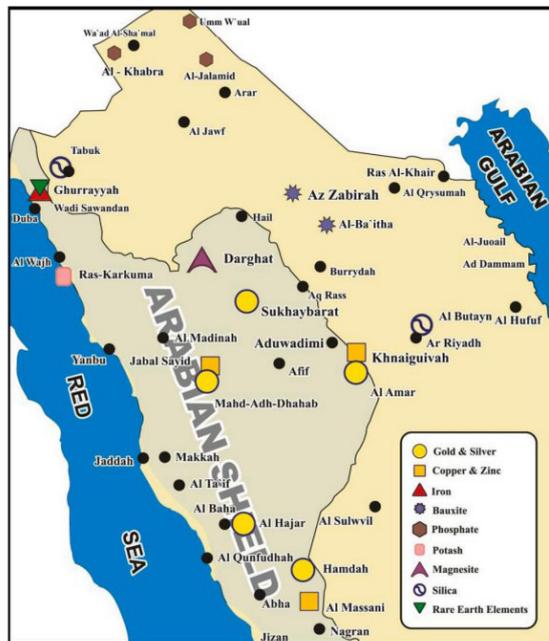
[사우디]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동안(2025.5.13~14.) 사우디와 1,4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광물기업 MP Materials*와 사우디 국영광업기업 마덴(Ma`aden) 간 희토류 공동개발 MOU를 체결

* MP Materials는 미국 최대 희토류 개발기업으로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채굴·가공 시설인 마운틴패스 광산을 운영 중, 2024년 전 세계 희토류 산화물 생산량의 15%를 공급

- (방산) 1,420억 달러 규모 무기 계약 체결, 동 계약에서 사우디는 방공·미사일 방어(THAAD, 패트리엇 미사일 등)·우주 역량·군 현대화 등 분야에서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10개 이상의 미국 방위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
- (핵심광물) 단순한 원광 수출이 아니라, 희토류 탐사·채굴·정제·영구자석 생산까지 공급망 전주기 개발 협력에 합의
- 사우디는 방산·항공·자동차·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 내 희토류 공급망을 자립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내외 핵심광물 개발에 투자를 확대 중
 - 사우디 산업광물부에 따르면 약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미개발 광물자원(구리, 희토류 등 48종 전략광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상업적 탐사·정제 수준은 초기 단계

[그림 1] 사우디 핵심광물 매장 지도



Author own drawing; Source data: Deputy Ministry for Mineral Resources (2020); Saudi Invest (2020) & Ma`aden (2019)

출처: Al Rawashdeh(2022)

- 사우디는 「사우디 Vision 2030」 전략 핵심축으로 광물 산업을 선정, 이를 통해 석유 의존 탈피 및 산업 다각화를 추진
- 사우디 정부는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약 150억 달러를 투자, 대표적으로 마덴이 니켈 광산을 보유한 브라질 Vale社의 지분 10%를 인수했으며, 현재 세계 리튬 30%를 생산하는 칠레 SQM 지분 인수를 논의 중
- 미국은 사우디를 통해 중동 내 자원 확보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첨단소재와 산업기반 구축에 깊이 개입하는 구조를 노정, 또한 중국 대체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을 우방국 내 구축해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UAE]

-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 동안 미국 방산기업 RTX(구 Raytheon)*와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Emirates Global Aluminium, EGA) 간 갈륨 생산 협력 MOU를 체결, 또한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 계약도 체결(2025.5.16.)
 - * 방산 및 항공우주 분야 대표 기업으로 미사일 방어, 센서, 레이더와 항공기 엔진 등을 생산
 - **(방산)** 사우디에 비해 무기 구매 규모는 약 16억 달러(CH-47 헬리콥터, F-16 전투기 부품 등)로 작지만, 미국 방산기업과 합작해 핵심광물인 갈륨을 미국에 공급하는 생산기지 역할
 - **(핵심광물)** 미국은 갈륨 공급망 다변화와 탈중국화를 위해 UAE의 알루미늄 정제 부산물에서 갈륨을 추출하는 기술을 활용해 갈륨 공급기지 구축을 목표
 - ※ (갈륨) 반도체 등 첨단전자제품에 필요한 희귀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 갈륨의 98%를 생산 중이며, 미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 미국의 對中 반도체 규제에 맞대응해 중국은 갈륨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2023.8.1.)
- UAE는 사우디처럼 자국내 핵심광물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으나, 알루미늄 등 기초금속 정제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외 광물자산을 매입 중, 또한 미국과 협력을 통해 반도체, 항공, 무기체계와 연계한 전략소재산업 진입을 목표
 - UAE 국부펀드와 민간기업들은 해외 소재 광산 및 광업기업 지분 인수를 적극 추진 중*
 - * 2023년 잠비아 구리광산을 인수, 현재 DR콩고, 케냐, 부룬디, 탄자니아와 광산 인수 논의 진행 중(UAE의 2022년 對아프리카 광물, 에너지 투자금액은 971억 달러로 세계1위)
 - UAE는 2050년까지 국내 자동차 절반을 E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4억 달러를 투자해 EV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리튬 정제시설을 건설 중
- 동 모델은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UAE의 산업다각화 및 기술 내재화를 지원하는 상호보완적 모델로 작동, 美 방산업체와 UAE 기업의 핵심광물 공동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의 대표 사례로 평가

■ [자원대가형: 우크라이나] 핵심광물 확보권을 전제로 한 무기 판매 구조

- 트럼프 2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일시 중단한 이후, 2025년 4월 우크라이나와 핵심광물 공동재건 펀드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제공한 군사원조 자금에 상응하는 수익권과 개발권을 확보하기로 합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기금 원칙과 조건 수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stablishing the Rules and Conditions of the Investment Fund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2025.4.30.)

- 동 협정은 우크라이나 핵심광물·에너지 등 천연자원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소유하는 재건펀드에 출자하는 구조로, 미국은 해당 펀드의 최대지분 및 실질적 의사 결정 권한을 확보, 동 펀드는 광물탐사·정제·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에 재투자될 예정

※ 미국은 동 협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보장 노력’을 지지한다고만 언급하였으며, 구속력 있는 안보조항은 명시되지 않음

※ 우크라이나는 세계 10대 광물부국 중 하나로, 희토류, 우라늄 등 50개 핵심광물 중 22개 품목이 매장되어 있으나, 주요 매장지는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 및 동남부 지역에 분포하며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예산부족과 안보 불안으로 개발 지연

[그림 2] 우크라이나 핵심광물 매장 지도



출처: BBC(2025)

- 협정 체결(4.30.) 직후 중단되었던 약 5,000만불 규모의 무기 판매가 재개되었고(5.1.), 미국은 우크라이나 내 희토류 등 자원 접근권과 재건 인프라 투자 권리를 동시에 확보
 -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자원을 통해 미국이 제공한 군사·재정적 지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발언(2025.2.3.), 미국 정부는 약 1,750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지원에 대한 실질적 회수를 추구
- 자원대가형 모델은 미국이 기존 무상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자산(핵심광물)을 담보로 군사·재정지원을 구조화한 실익기반 협력모델
 - 동 협정은 미국의 자원 접근권 확대와 우크라이나의 재건자금 마련이라는 양측 이해관계가 맞물려 추진된 사례이나, 미국 측의 과도한 지분 요구에 대해 ‘약탈적 자원외교’라는 비판도 제기(NY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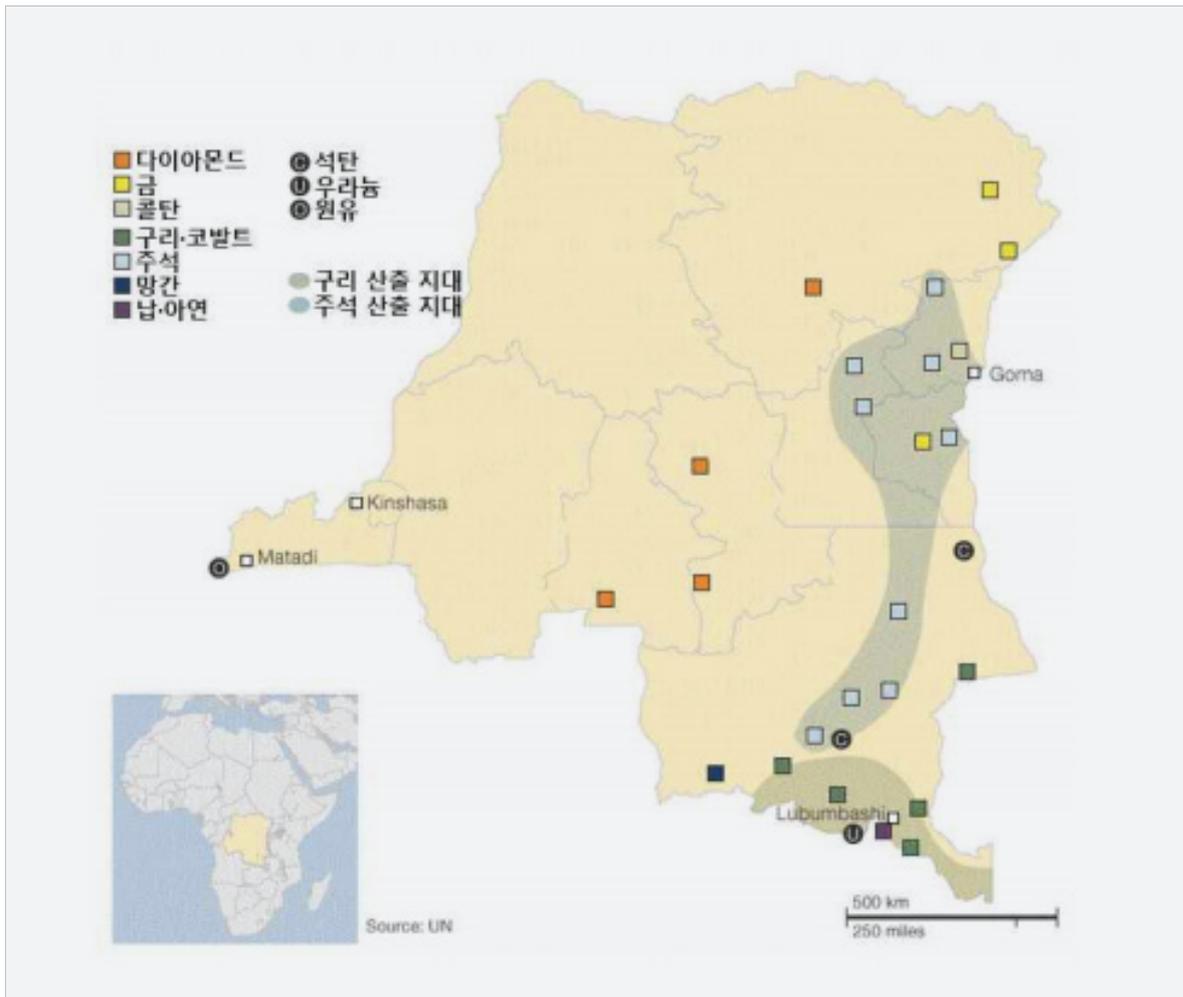
■ [중재·진출형: DR콩고-르완다] 무장분쟁 중재 및 지역 안보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중국이 장악한 아프리카 핵심광물 시장에 미국기업 진출 기반을 조성

- 미국은 르완다와 DR콩고 간 분쟁을 중재하며 평화협정을 체결(2025.6.27.), 동 협정에서 ‘경제통합프레임워크’를 출범해 핵심광물 관련 美 정부·투자자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DR콩고-르완다 내 투명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합의
 - 무력행위 중단, 접경지역 공동감시체계 설치*, 핵심광물 공급망의 투명화 및 추적시스템 마련 등을 포함해 동 협정을 통해 美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
 - * 미국이 공동감독위원회(JOC)와 공동안보조정메커니즘(JSCM)회의에서 옵서버로 참여해 모니터링
 - 미국이 직접 무기나 병력을 제공하지 않지만, 외교·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현지 안정을 조성하고, 이후 핵심광물에 대한 자원 접근권을 확보하는 구조로 작동
 - 이후 미국 컨소시엄이 DR콩고 에투알 구리-코발트 광산 운영업체에 입찰했으며, 미국 민간기업 코볼드 메탈(KoBold Metals)이 DR콩고 마노노 지역 리튬 탐사계약을 체결

- (DR 콩고-르완다 분쟁) 르완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DR콩고 동부지역(고마, Goma)에는 코발트, 구리,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이 매장,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반군 M23이 동 지역을 점령하고 불법채굴한 광물을 르완다를 거쳐 수출, 그 수익으로 반군 무장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분쟁 지속
- (M23) 2012년 창설된 무장 반군조직으로, 주요 구성원은 DR콩고 투치족 출신, 2009년 DR콩고와 투치계 콩고민주해방민주군(CNDC)의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장투쟁을 시작, 콩고 내 투치족 보호, 르완다계 콩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

- DR 콩고는 세계 2위 구리 및 1위 코발트 생산국으로 글로벌 코발트 공급량의 80%를 생산하나 중국 기업이 채굴·정제 및 수송 인프라 시장 대부분을 장악 중
 - DR콩고는 아프리카 구리 벨트(Copper belt)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첨단산업에 필수인 구리와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소재인 코발트 및 리튬 포함 풍부한 핵심광물 매장량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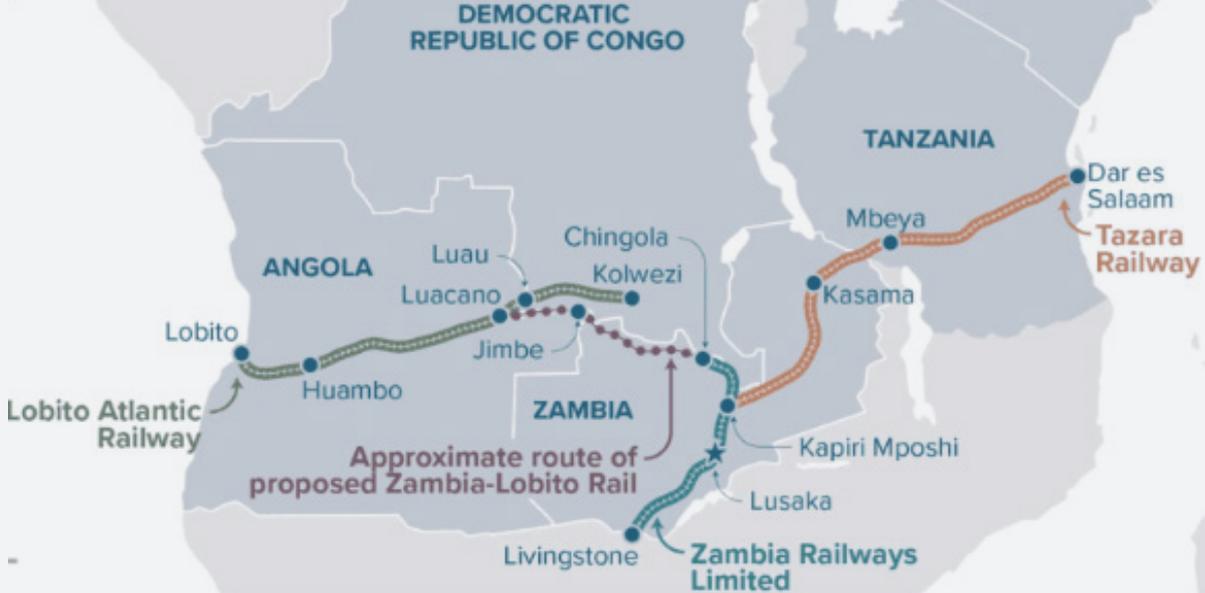
[그림 3] DR콩고 주요 자원지도



출처: EMERiCs 아프리카중동(2023)

- 중국 기업들은 지난 10년 간 서방 기업에게서 DR콩고 광산을 적극 인수*, 2025년 현재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인 中 CMOC는 DR콩고 최대 코발트 광산인 텐케퐁구루메 광산 80%, 키산푸 광산 95% 지분을 보유 중이며 연간 약 5,5000톤의 코발트를 생산 중
 - * 美 프리포트-맥모란(Freepor-McMoran)은 경영악화로 각각 2016년과 2020년에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 중 두 곳인 텐케퐁구루메와 키산푸 광산을 CMOC(구 차이나 몰리브덴)에 매각
- 중국은 잠비아-탄자니아를 잇는 타자라 철도 건설 등 아프리카 내 광물수송 인프라에도 투자, 미국은 중국의 아프리카 내 핵심광물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잠비아-DR콩고 광산과 앙골라 로비토 항구를 연결하는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에 투자 중(그림 4 참조)

[그림 4] 아프리카 내 美·中 인프라 경쟁

로비토 회랑(철도)	타자라 철도
	
<p>(위치) 앙골라-잠비아-DR콩고</p> <p>(참여국) 미국, 앙골라, 잠비아, DR콩고</p> <p>(현황) 2022년 스위스·포르투갈 컨소시엄 철도 운영권을 확보 → 2025년 현재 부분 운영 중</p> <p>(자금조달) 美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남아프리카개발은행(DBSA)</p> <p>(연결항구) 대서양(앙골라 로비토 항구)</p>	<p>(위치) 잠비아-탄자니아</p> <p>(참여국) 중국, 잠비아, 탄자니아</p> <p>(현황) 1970년대 중국의 지원으로 완공, 철도 노후화에 따른 운송 지연으로 운영 차질, 中·잠비아·탄자니아 철도 재건 MOU 체결(2024년 9월)</p> <p>(자금조달) 중국, 세계은행</p> <p>(연결항구) 인도양(탄자니아 다르에르살람 항구)</p>

- 동 협정을 통해 미국은 중재자로서 DR콩고 내 광물자원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 확보 동시에 중국의 DR콩고 내 핵심광물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DR콩고 사례는 무기 판매 없이 정치적 중재와 지역 안보개입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에 진입한 구조로,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전략 중에서도 비군사적 안보개입형 모델로 분류 → 무기-자원 교환 없이도 공급망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확장의 대표 사례로 평가
 - DR콩고 동부지역 분쟁은 단순한 무장 충돌이 아니라 광물자원과 이권 문제가 걸려있는 경제적 측면도 있는 만큼, 군사-경제를 포괄하는 미측 접근법이 효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
 - 동 모델은 미국이 향후 중국의 핵심광물 지배력이 높은 다른 아프리카 자원국(잠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추정

[표 2] 미국의 국가별 방산·핵심광물 경제안보 전략모델 비교

모델 유형	대표 사례	구조
공동개발형	사우디, UAE	합작투자 연계형 (공동투자 + 공급망 다변화) - 무기 수출 + 합작통한 광물 생산기지 건설(갈륨, 희토류 등)
중재-진출형	DR콩고-르완다	개입형 - 분쟁 중재 → 美 광물기업 진출 기반 확보
자원대가형	우크라이나	공동투자/순환형, 실익환수형 - 광물·인프라 수익권 확보 → 군사원조 승인구조

3. 전략적 배경과 목적

■ 미국의 대외경제안보 전략은 기존의 자유무역 중심모델에서 벗어나, 안보·자원·산업기반을 결합한 구조로 진화

- 군사안보, 공급망 안보, 기술안보를 통합한 경제안보 외교(Economic Security Diplomacy)가 강화되는 추세
 - 방산은 단순한 무기 수출산업이 아닌, 동맹국 전략자산 확보와 공급망 주도권 확대 수단
 - 첨단기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필수인 핵심광물 44종 중 30종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 기업이 장악 → 지정학 위기 발생시 공급망 위기 발생 가능(美 상무부, 2025.4.23.)

■ 미국은 방산·핵심광물을 파트너국별 맞춤형으로 패키지와, 무기 판매를 단순 판매가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투자·경제안보 협력의 지렛대로 활용 → 중국 핵심광물 공급망을 대체하는 프렌드쇼어링 공급망 구축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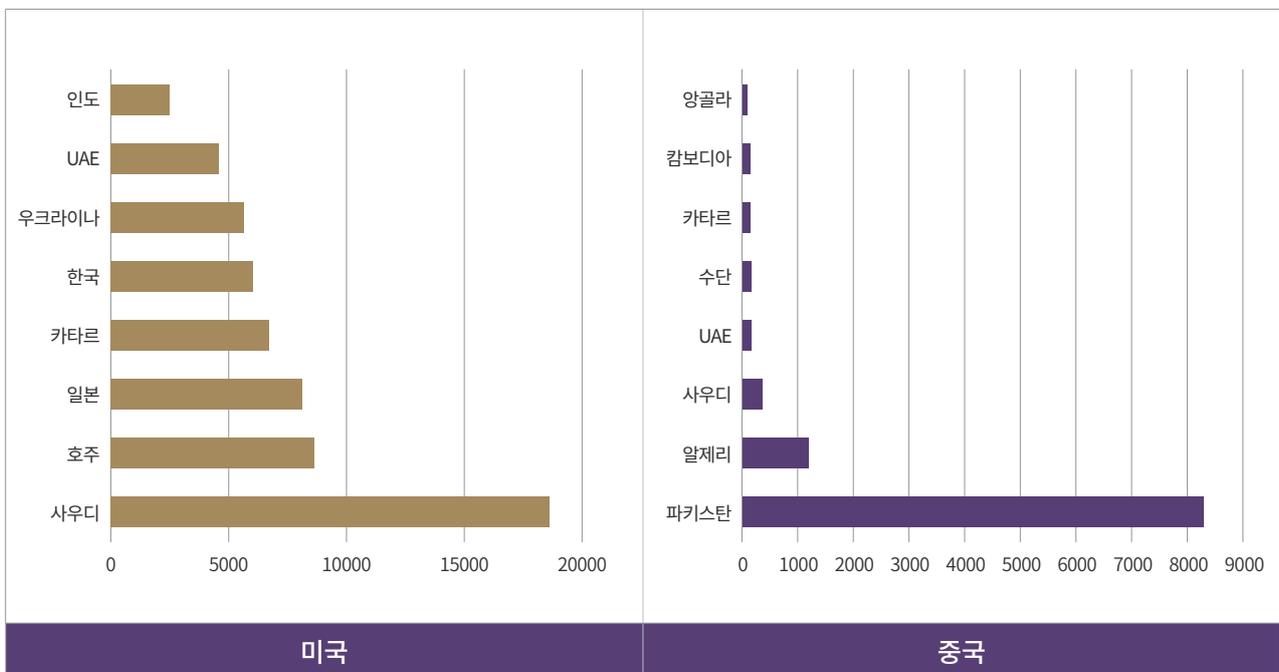
- (방산과 핵심광물 공급망 연계) 무기 수출과 핵심광물 공동개발을 패키지로 제공 → 군사·경제안보 통합을 통한 동맹 강화 및 영향력 유지
- (對中 핵심광물 의존 축소) 전 세계 핵심광물 시장의 중국 집중도 줄이고, 파트너국의 핵심광물 산업·기술 자립성 강화 및 중국 대체 공급망 구축
 - ▲(사우디, 우크라이나) 희토류 ▲(UAE) 갈륨 ▲(DR콩고·르완다) 구리, 코발트 등
 - ※ 중국은 전 세계 리튬 및 코발트 제련에 70%, 희토류 정제 90%를 장악, 또한 재생에너지 및 EV 제조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하며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을 교란(IISS, 2025)
-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연결) 광물 공급망 전주기인 ‘채굴(업스트림) → 정제·제련(미드스트림) → 첨단산업·제조(다운스트림)’을 포함한 수직 통합 구축 목표

● (美 방산시장 우위 유지) 파트너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시장 진출 견제, 첨단 무기 수출로 파트너국의 안보를 보장하며 군사적 영향력 유지

- 미국의 무기 수출은 걸프 산유국과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동맹국(호주, 한국, 일본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우디는 2015년에서 2024년 누적 미국의 방산 수출의 1위 국(그림 5 참조)
- 사우디는 중국의 3위 무기 수출 대상국(그림 5 참조)이며 UAE와 무기 거래도 늘어나는 중, 특히 큰 규모는 아니나 중국의 탄자니아, 르완다, DR콩고와 같은 아프리카 자원부국에 대한 무기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SIPRI, 2025)

※ UAE는 美 F-35 도입을 지속 시도했으나 美 의회 반대로 지연되자 中 스텔스기 J-20 구매를 고려한다고 발표(2024.4월), 만약 UAE가 J-20 전투기 도입에 합의할 시 미국의 對중동 무기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역내 세력 균형 변화 가능성도 존재

[그림 5] 미국 vs 중국: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 비교 (2015~2024년 누적, TIVs*)



출처: SIPRI Database(Arms Sales Transfer)에 기반해 저자 작성

* TIVs(Trend-Indicator Value): SIPRI에서 제공하는 무기 단위당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표로, 실제 금액은 아니나 무기 거래의 군사적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정량적 단위

■ 파트너국 입장에서 자국 핵심광물 산업 육성, 미국과 전략적 연계 강화 등을 목표로 미국과 방산·핵심광물 협력에 참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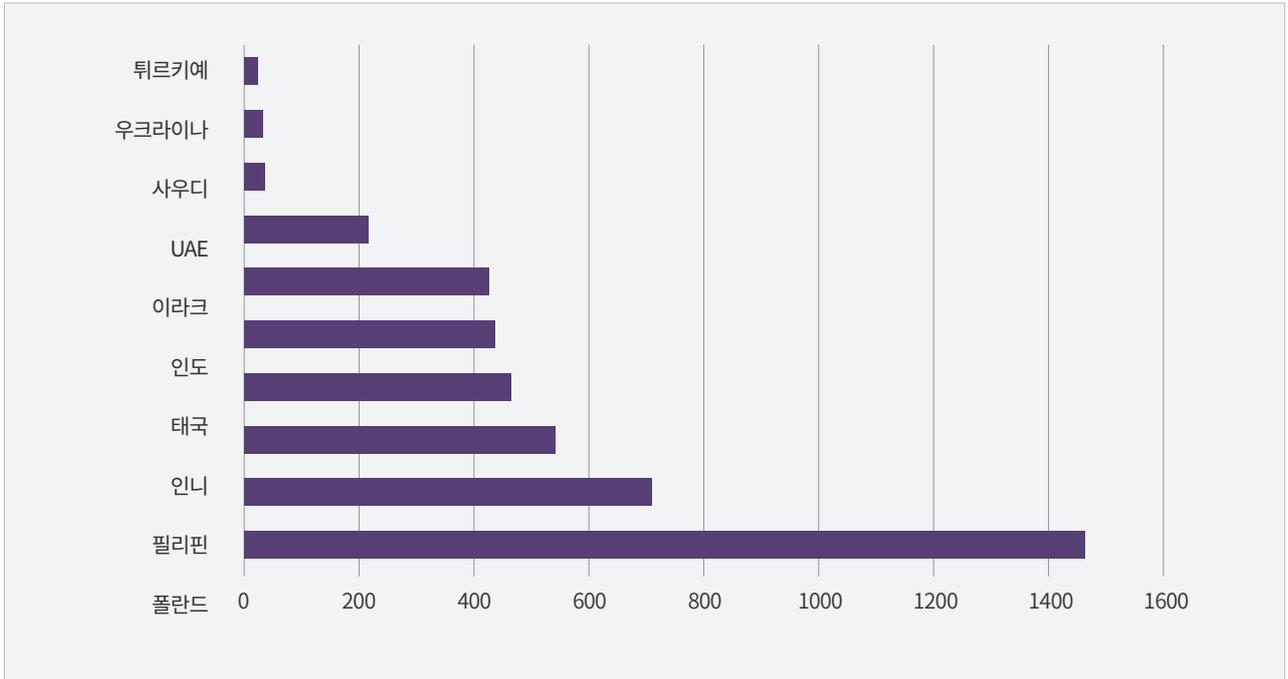
- 무기 수입과 병행해 핵심광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 특히 사우디와 UAE는 중장기적 경제안보 및 산업정책으로 핵심광물 산업에 투자 중
- 사우디와 UAE는 석유의존 경제에서 벗어난 산업다각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국 핵심광물 산업 육성에 투자 중

- 석유 수익을 통한 막대한 투자자금 확보, 광물 생산에 필요한 풍부한 에너지 보유, 동서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중
-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며, 지정학적 자산으로 핵심광물을 활용
 - 사우디와 UAE의 경우 중국을 대체하는 신뢰가능한 핵심광물 공급국으로 전환을 목표
- 방산과 핵심광물 이라는 두 분야를 결합한 패키지 협력을 통해 산업고도화 및 외교적 레버리지 확보
 - DR공고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중국과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 중국 기업의 자국내 광물산업 독점우려와 광산 내 아동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환경·지역 사회 갈등 등 지속되는 사회적 이슈로 DR공고는 중국과 파트너십을 재조정해 자국의 지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을 대체할 다른 투자국을 물색

4. 평가 및 시사점

-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협력 모델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전략적 동맹화와 공급망 블록화(프렌드쇼어링)의 실질적 도구로 작동
 - (전략적 의미) 방산·핵심광물 연계 패키지를 통해 군사·경제안보를 결합, 中 광물 공급망 우위 구조를 견제하면서 동맹국 간 프렌드쇼어링을 실현
 - (파트너국 기대효과) 파트너국은 최신 무기체계 확보와 함께 자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탐사·채굴·정제·첨단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 기존 광물 채굴에만 국한하지 않고 EV 배터리 생산 등 첨단산업 투자로 순환되는 구조를 지향
 - (한계) 핵심광물의 실질적 생산 및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
 - 이미 저가로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핵심광물과 경쟁력이 있을지는 불확실
 - DR공고·르완다 분쟁 재발가능성과 낙후된 광물 인프라, 우크라이나 안보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 광물개발 및 투자가 불투명
- (한국에 주는 시사점) 향후 우리도 K-방산 수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를 통합해 지정학적 전략 구상 필요
 - (K-방산·핵심광물 모델 개발) K-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국가(예: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UAE 등)와 협력 시, 광물 공동 개발 또는 산업설비 수출을 연계하는 구조 필요
 - 국내 기업의 광물탐사·정제·배터리 및 반도체 제조 역량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 가능
 - 특히 우리 강점인 핵심광물 공급망 다운스트림 영역(EV 배터리 제조 등)은 미국과 EU에 비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광물 정·제련 뿐만 아니라 배터리, EV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파트너국 입장에서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상(박소영, 2025)

[그림 6]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 비교 (2015~2024년 누적)



출처: SIPRI Database(Arms Sales Transfer)에 기반해 저자 작성

<향후 한국형 방산-광물 대외협력 전략 설계 방향>

-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기술이전 중심의 협력에 광물 개발 협력을 묶어 실질적 우호를 강화 / 3국 모두 IPEF 공급망 협약 가입국으로 광물 관련 협력 협의체로 활용 가능

※ 인도네시아(2022년 체결, 2024년 만료 후 갱신 논의 중), 필리핀(2024년)은 우리와 양자 핵심광물 MOU 체결국

- (폴란드) 방산 장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관련 광물 공급 협력 연계 / 보유 광물은 부족하나, 우리기업의 유럽 광물시장 진출 및 협력 허브로 활용 가능
- (사우디·UAE) 방산 수출과 동시에 자원 안보 협력, 전략광물 파트너로서 포괄적 전략 구축

- (산업 생태계 연계 전략)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파트너국의 광물개발 인프라 및 산업 연계 가능성 검토 필요

- K-방산 계약 체결 시, 상대국의 광물개발 수요 및 자원 보유현황을 사전 분석하여, '핵심광물-무기-기술이전'이 하나로 묶이는 협력 구조 설계도 가능
- 국내 방산-배터리-반도체 기업이 공동으로 해외 광물 생산거점에 투자하여, 공급망과 산업을 통합하는 클러스터 전략 추진

- (외교·안보 관점) 전통적 ODA를 넘어 경제안보형 개발협력 모델로 전환 필요

참고문헌

- 오정석(2025). 강대국은 어떻게 미래를 확보하는가: 한눈에 보는 원자재 패권 지도. 한빛비즈.
- 김연숙(2025.3.14.). “우크라이나 안보, 광물협정으로 충분하다는 미...옛사례 보면 ‘글세’”. 연합뉴스.
- 김예진(2023.3.24.). “[동향세미나] 콩고민주공화국, M23과의 분쟁 중단 합의 실패”. EMERICs 아프리카·중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국희(2025.5.19.). “중동 3국 돌고 나니 2791조원...트럼프 순방서 챙긴 선물 보니”. 조선일보.
- 박소영(2025.6.24.). “아프리카 광물 확보 경쟁 속 주요국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
- 신민철(2025.7.29.). “콩고 핵심광물 두고 미중 지배권 다툼 격화, 중 콩고 문제 해결 지원 반격”. 글로벌이코노믹.
- 이슬기(2024.10.7.). “한·필리핀, 핵심 원자재 공급망원전 협력 MOU 체결”. 연합뉴스.
- 최현호(2024.5.14.). “미 의회에 화난 UAE... 그 사이 파고든 중국산 스텔스기 J-20”. 중앙일보.
- Abdujalil Abdurasulov and Robert Plummer(2025.5.1.). “What minerals does Ukraine have and what are they used for?”. BBC.
- Adam Krzymowski(2023).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in strategic connection with the Abraham Accords and the Three Seas Initiativ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7(4):179-194.
- Aidan Powers-Riggs, Vrian Hart, Matthew P. Funaiole et al.(2025.7.17.). “Beyond rare earths: China’s growing threat to gallium supply chains”. CSIS.
- Agnes Helou(2025.5.16.). “RTX deepens footprint in UAE with gallium project and counter-drone facility”. Defense Business Report.
- Andrew E. Kramer, Maria Varenikova, Constant Meheut and Kim Barker(2025.5.1.). “The U.S.-Ukraine mineral deal: What we know”. The New York Times.
- Arab News(2025.4.14.). “Saudi Arabia, US to deepen mining ties after high-level talks with energy secretary Chris Wright”. Arab News.
- Asna Wajid(2025.6.31.). “The geopolitics of the Gulf states’ push for critical minerals”. IISS.
- Elemora Ardemagni(2024.10.29.). “Defence and Connectivity: The UAE becomes Washington’s super ally”. RUSI.
- Gracelin Baskaran(2024.9.6.). “Partnering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boost U.S. minerals security”. CSIS.
- _____.(2025.3.25.). “Building critical minerals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SIS.
- Gracelin Baskaran and Duncan Wood(2025.2.10.). “Critical minerals and the future of the U.S. economy”. CSIS.
- Ider Singh Bisht(2025.5.19.). “RTX teams with UAE partners to produce defense-critical gallium”. The Defense Post.
- Jennifer A Dlouhy and Kate Sullivan(2025.5.16.). “Trump touts \$200 billion in UAE deals in wrapping mideast trip”. Bloomberg.

- Rami Al Rawashdeh and Gary Campbell(2022). “Mineral policy in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 The case of Saudi Arabia”. The Extractive Industries and Society 9: 1-18.
- Reuters(2025.2.3.). “Trump says he wants Ukraine to supply US with rare earths”. Reuters.
- Jevans Nyabiage(2025.7.28.). “China faces off against US for domination of the Congo’s critical minerals industry”. South China Morning Post.
- Valentina Pasquali(2024.12.4.). “Critical minerals become a Middle East battleground”. Arabian Gulf Business Insight.
- _____ . (2025.6.10.). “UAE-US gallium project is an attempt to loosen China’s grip”. Arabian Gulf Business Insight.
- Will Mortenson(2025.6.27.). “The DRC and Rwandan agreed to a US-backed peace deal. Can critical minerals help end this conflict?”. Atlantic Council.
- Al-Sharq Awsat(2023.7.30.). “Ma`aden, alsaediat tuelin eadam wusuliha 1iilaa 10% min Vale al-Barazill”. *Ah-Sharq Awsat. (in Arabic)*
- Imarat al-yaum(2024.7.21.), “Al-Imarat tuzhr twjhaan mdrwsaan lilaistithmar bialtaedin fi `iifriqia”. *Al-Imarat al-yaum. (in Arabic)*
- Iqtisad al-Sharq. (2023.7.28.). “Al-saudiat tueaziz makanataha fi sinaeat altaedin alealamiat bisafqat baraziliat qimatuha 2.6 milyar dular”. *Iqtisad al-Sharq. (in Arabic).*
- 美 상무부(2025.4.23.). “Commerce launches Section 232 investigation on imports of processed critical minerals and derivative products”.
- 美 국무부(2025.6.27.). “Peace agreement betwee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the Republic of Rwanda”.
- The White House(2025.5.1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600 billion investment commitment in Saudi Arabia”.
- The White House(2025.5.15.).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200 billion in new U.S. - UAE deals and accelerates previously committed \$1.4 trillion UAE investment”.

[웹사이트]

- SIPRI Arms Transfer Database(<https://sipri.org/databases>).

저자 소개

유아름 | aryoo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기술패권 경쟁, 디지털·AI 규범, 디지털 통상, 빅데이터 분석, 에너지, 중동 정치경제이다. 주요 연구로는 『주요국(美·EU·中·日)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 경제안보리뷰 24-1호(2024), 『클라우드 산업과 경제안보: 데이터안보와 기술통제』 경제안보리뷰 24-16호(2024),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경제안보리뷰 25-7호(2025) 등이 있다.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최용호 전문관

요약

■ 배경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품목관세 정책 추진, 최근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관세율 조정

⇒ 경제안보 관점에서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필요

■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 전반적으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규모 對美 투자 ▲미국산 물품 구매 ▲미국 수출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등의 내용이 협상 결과에 포함

※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본문 참조

■ 분석 및 평가

- (경제안보)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적 취약성 완화 ▲경쟁국 견제 등 고려하여 ▲미국 재산업화 및 ▲공급망 재편 추진

* USTR Greer 대표는 미-EU 무역합의 포함, 미국이 타결한 합의들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WTO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로 변화)

- (전략적 취약성 완화)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전략산업 미국 리쇼어링 및 투자 유도 ▲취약 품목 확보 ▲무역 질서 개편 및 경제적 이득 확보 등에 주력
- (경쟁국 견제) 동시에 제3국 환적 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등 관세 회피 및 우회 수출 방지 요소도 협상에 포함 / 다만, 비시장 관행 대응, 공급과잉 대응 등의 요소는 일부 국가(영국, 인도네시아, EU 등)의 협상 내용에만 포함
- (협상 방식) 미국은 수요처로서의 세계 최대 시장 보유라는 강점을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노력
 - 전통적인 무역협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형태로 신속하게 협상 결과 도출 / 그 과정에서 합의의 세부 내용 다소 불분명
 - 미국 행정부는 상대방의 양보 확보 등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시적 성과(국가들의 對美 투자 유치 등) 및 협상 승리 선언 도출에 주력
- (후속 협의) 이번에 발표된 주요국의 상호관세 협상 내용에 불분명한 요소 일부 포함 ⇒ 향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해 조율 및 실무 협의 지속 전망
 - ▲관세율 적용 방식(MFN 관세 포함 여부) ▲對美 투자 이행의 구체적 방식 ▲미국산 구매의 범위와 수준 ▲미국에 대한 시장 개방의 구체적 수준 등을 둘러싼 국가별 해석상의 차이 발생 가능

1. 배경

■ (상호관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부과 선언 / 일부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한 이후 본격적으로 상호관세 정책 시행 (2025.8.7. 발효)

- (경과)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율 상이) 발표(2025.4.2.) → 두 차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및 일부 국가들에 관세율 조정 서한 발송, 국가별 협상 진행 → 협상 결과를 반영한 조정된 상호관세율 발표*(7.31.) 및 시행(8.7.)

* ‘상호관세 추가조정 행정명령(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상호관세 추가조정 행정명령’ 주요 내용

- (관세율 조정)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별 부과되는 관세율 조정
- (환적)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 수출로 적발된 물품은 상호관세 대신 40% 관세율 적용 및 기타 적절한 벌금 또는 제재 부과

주요 국가별 상호관세율(추가 증가세) 변화

구분	대한민국	일본	EU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최초 발표(4.2.)	25%	24%	20%	10%	32%	46%	17%
중간 조정 서한(7월)	25%	25%	30%	-	32%	-	20%
관세 협상 이후 조정(7.31.)	15%	15%	15%*	10%	19%	20%	19%

* EU: ▲(기존 관세율 15% 이상 상품) 추가 관세율 0% ▲(기존 관세율 15% 미만 상품) 기존 관세율에 추가 관세율을 합산해 총 15% / 한편, 일본은 EU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관세율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측에 행정명령 수정 요청

■ (품목관세)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상기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관세 부과

주요 품목별 관세율(관세협상 未 합의 시)

구분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반도체	의약품
품목관세	25%	50%	50%	50%	부과 예고	부과 예고

- 미국은 주요 무역상대국(한국, 일본, EU, 영국 등)간 합의를 통해 상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인하여 합의하였으나, 영국 이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2025.8.8.)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

- 미국 행정부는 상기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별 국가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바, 현시점에서 주요 국가의 대미 관세 협상 결과 분석 필요

2. 미국-일본 무역 합의(2025.7.22.) 주요 내용

- (미국 발표 내용) 미국의 관세 인하 / 일본의 ▲對美 투자 확대 ▲시장 개방 확대 ▲미국산 구매 확대 ※ 美 백악관 발표 Fact Sheet 및 주요 인사 발언 중심

- (상호관세) 관세율 15% 적용(25% → 15%)

- 백악관은 동 관세로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품목관세)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관세 15%(25% → 15%), 철강 · 알루미늄 50%*

- *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백악관 발표 「Fact Sheet」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측 주요 인사 구두 언급

- (對美 투자 확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 · 확장 위해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 해당 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전략 분야(▲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등)에 활용 / 미국이 투자 이익의 90% 보유

- (미국 생산자 시장 접근 보장 및 미국산 구매 확대) 농산물, 방산물자, 자동차 등 미국산 품목에 대한 일본의 구매 및 시장 접근 약속

- (농업) 일본은 미국의 주요 농산물(▲옥수수 ▲대두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항공유 ▲비료 등) 80억 달러 규모 추가 구매 / 일본은 미국 쌀 수입을 75% 증가, 수입 쿼터 대폭 확대

- (에너지) 미일은 알래스카 LNG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모색 중 / 미국의 對日 에너지 수출 대폭 확대

- (방산물자) 일본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 방산물자 추가 구매 / 보잉기 100대 포함 미국산 항공기 구매

- (자동차) 산업, 소비재 제품에 대한 일본 시장 개방 확대하여 미국 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특히, 美 자동차, 트럭에 대한 일본의 규제 철폐

- (합의 이행) 미국은 합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에 만족하지 않으면 관세율 25% 수준으로 복귀 가능*

- * 「Fact Sheet」 등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美 재무장관 Bessent 구두 언급(7.23.)

- (일본 발표 내용) 미국의 발표 내용과 큰 틀에서 유사 / 다만, 일본의 관점에서의 상세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에서 미국 측 발표와 차이 존재

※ 日 내각관방 홈페이지 게시 자료 및 주요 인사 발언 중심

- **(상호관세) 관세율 15% 적용(25% → 15%, MFN 세율 포함)**
 - MFN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5% 미만 품목에는 15% 적용
- **(품목관세)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관세 15%(25% → 15%, MFN 세율 포함)**
 -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미국이 관세 부과 시 일본은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약속
- **(對美 투자 확대)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 · 용자 · 용자보증 제공**
 -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분야(미측 언급 5개 분야 + ▲항공 ▲철강 ▲자동차 ▲AI ▲양자 등)에 투자하여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도록 미국 내 강력한 공급망 구축 / 투자이익 배분 비율은 양측이 부담하는 기여도와 위험도의 정도를 고려하여 1:9의 비율로 설정*
 - * 日측 협상 담당자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언론 인터뷰(7.26)에서 “日측 출자는 1~2%가 될 것이며, 수익 배분 비율은 출자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류호 2025.7.27.)
- **(미국 생산자 시장 접근 보장 및 미국산 구매 확대) 일본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해 무역 확대 / 다만, 농산물을 포함하여 일본 측의 관세 인하 未 포함**
 - **(농업) 일본은 미국의 주요 농산물(▲옥수수 ▲대두 ▲바이오에탄올 ▲비료 등) 구매 확대 / 일본은 ‘최소시장접근(MMA)*’ 제도 내에서 일본 국내의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쌀 조달 확보****
 - * (Minimum Market Access)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쌀 관세화 유예 대신 일정 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약속. 그 결과, 일본은 연간 약 77만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무관세로 수입하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 ** 日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적인 쌀 개방은 없으며, 일본이 매년 수입하는 77만톤 중 미국산 쌀 비중만 늘어난다고 설명(고송희 2025.8.1.)
 - **(에너지) 일본은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매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
 - **(방산물자) 이미 결정된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른 일본의 미국 방산물자 구매가 이미 무역 불균형 개선에 기여함을 미국측에 설명 / 향후 방위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구매할 장비의 기종과 수량 결정 예정***
 - * 방산물자 관련 합의 사항은 일본 측에서 게시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 무역협상과 방위비 협상과의 연계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日 관방장관이 위와 같이 설명
 - **(자동차) 일본의 교통 환경에서 안전한 美 제조 승용차를 추가 시험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조치 / 일본의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운용 적절히 재검토**
 - **(기타 구매) 반도체, 항공기 등 미국산 구매 확대 / 다만, 항공사 구매 등은 기존 구매 계획도 염두에 둔 것(日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구두 언급, 7.24.)**
- **(합의 이행) 합의 이행방식에 대한 별도 논의 별무***
 - * 日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구두 언급(7.24.)

3. 미국-EU 무역 합의(2025.7.27.) 주요 내용

■ (미국 발표 내용) 미국의 관세 인하 / EU의 ▲對美 투자 확대 ▲시장 개방 확대 ▲미국산 구매 확대 ※ 美 백악관 발표 Fact Sheet 및 주요 인사 발언 중심

● (상호관세) 관세율 15% 적용(30% → 15%)

- 백악관은 동 관세로 미국 내 리쇼어링을 유도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무역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품목관세) 자동차 ·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관세 15%,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50% 유지*

* 「Fact Sheet」 과 별도로 Lutnick 상무장관은 철강, 알루미늄 등도 추후 협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7.29.)

- (EU산 전략물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EU산 코르크 등 전략물품은 무관세로 수출 가능*

* 이 내용은 「Fact Sheet」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Lutnick 상무장관이 구두로 설명(7.29.)

● (對美 투자 확대) 매년 EU가 진행 중인 1,000억 달러 규모 투자에 추가하여 6,000억 달러 신규 투자

● (미국 생산자 시장 접근 보장 및 미국산 구매 확대) EU는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접근 확대 / 에너지, 방산물자 등에 대한 EU의 미국산 구매 약속

- (농업) 미국산 돼지고기, 유제품에 관련 위생 인증 간소화 등 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노력 / 미국산 EU 시장접근 기회 부여를 위해 노력

- (미국산 물품 등) 미국의 수출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여타 다른 물품에 대해 의미 있는 쿼터를 제공하여 미국 수출의 EU 시장 접근 기회가 생기도록 양국이 노력 / 미국 수출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EU의 불필요한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에너지) EU는 2028년까지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규모 구매

- (방산물자) EU는 상당한 규모(significant amount)의 미국산 방산물자 구매

- (디지털) EU는 망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겠다고 확인(confirm) / 디지털 상품 무관세 유지

- (원산지 규정) 미국과 EU 양자합의의 혜택이 제3국에 가는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규정 강화

- (상업적 합의) 미국과 EU는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상업적 합의를 인정(recognize)

● (경제안보) 양국은 공급망 복원력 및 혁신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 비시장 관행 대응, 수출통제 · 투자심사, 관세회피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 (합의 이행) 미국은 합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EU가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율 변동 가능*

* 「Fact Sheet」 등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美 재무장관 Bessent 구두 언급(7.29.)

■ (EU 발표 내용) 미국의 발표 내용과 큰 틀에서 유사 / 다만, EU의 관점에서의 상세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에서 차이 존재

※ EU 발표 공식 보도자료 및 주요 인사 발언 중심

- (상호관세) 관세율 15% 적용(25% → 15%, MFN 세율 포함)
 - 현재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거의 모든 EU 수출품에 15% 관세 적용 / 다만, MFN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 未 부과
- (품목관세) 자동차 ·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관세 15% /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50%
 - (자동차 · 자동차 부품) 현재 최대 25%의 품목별 관세에 MFN 관세 2.5%가 추가되어 적용 중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8월 1일부터 15% 적용
 - (반도체 · 의약품) 향후 동 품목에 대한 잠재적 관세 부과에도 15% 상한선 적용 / 동 품목에 대한 추가 232조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전까지는 MFN 관세만 적용
 -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공급과잉은 양국 모두를 위협 / 양국은 EU의 수출에 대해 과거 수준의 관세할당(TRQ)을 설정하고, 50% 수준인 현재의 관세를 축소할 예정이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 (EU산 전략물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EU의 항공기 · 항공기 부품, 일부 화학물질, 특정 복제약품, 천연자원 등에 대해 금년 1월 수준의 관세 부과
- (對美 투자 확대) EU는 2029년까지 최소 6,000억 달러 신규 투자 희망
- (미국 생산자 시장 접근 보장 및 미국산 구매 확대) EU는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접근 확대 / 이를 통해 EU 수입업체와 소비자는 연간 약 50억 유로 규모 절감 예정이며, 핵심 EU 산업 및 농업 민감성은 보호
 - (농업) 민감하지 않은 일부 농산품(대두유, 곡물, 견과류, 토마토 캐첩, 코코아, 비스킷 등) TRQ 제도 내 미국산에 대해 시장 접근 확대(75억 유로 규모) / 알래스카 명태, 태평양 연어, 새우 등 일부 미국산 수산물도 TRQ 제도 범위 내에서 EU 시장 접근 확대*
 - * EU는 핵심 EU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한 합의라는 점 강조
 - (미국산 물품 등)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잔여 저율 관세 철폐 / 자동차 기준과 위생검역 조치 협력 / 산업 분야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확대 등
 - (에너지) EU는 향후 3년간 LNG, 석유, 원자력 등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규모 구매
 - (기타) 미국이 발표한 ▲방산물자 구매 ▲디지털 ▲원산지 규정 관련 내용은 EU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未 포함
 - (상업적 합의) EU는 약 400억 유로 규모의 AI 반도체 구매
- (경제안보) 공급망 복원력 강화, 비시장 관행 · 정책 대응, 수출통제 · 투자심사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 (합의 이행) 7월 27일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 / 양국은 즉각적 이행사항 이행 후 각자의 내부절차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

4. 한국-미국 무역 합의(2025.7.30.) 주요 내용

■ (한국 발표 내용) 미국의 관세 인하 / 한국의 ▲對美 투자 확대 ▲시장 개방 확대 ▲미국산 구매 확대

※ 우리 정부 발표 자료 및 주요 인사 발언 중심(강정미 2025.8.1; 산업통상자원부 2025.7.30. 등)

- (상호관세) 관세율 15% 적용(25% → 15%)
- (품목관세) 자동차 · 자동차 부품 관세 15%(25% → 15%)
 -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미국이 관세 부과 시 한국은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 철강 ·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협상에 未 포함(기존 50% 유지)
- (韓美 협력 사업) 한국은 조선 등 전략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 추진
 - (MASGA 프로젝트)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패키지를 구성하여 미국 조선소 인수 · 확장, 인력 양성, 선박 유지 · 보수(MRO)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 / 미국 내 조선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전략산업 금융 패키지)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구성하여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금융 지원 예정
 - ※ 미국 행정부는 투자 펀드를 미국이 통제하며, 투자이익의 90%는 미국에게 돌아간다고 표현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검토하고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투자이익 90% 미국 보유” 발언도 “미국 내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실무 협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부연 설명(김연주 2025.8.1.; 김태준 2025.8.4., 이종현 · 송복규 2025.7.31.)
- (미국 생산자 시장 접근 보장 및 미국산 구매 확대) 한국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해 무역 확대 / 다만,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
 - (농업) 쌀 ·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은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 / 다만,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는 지속
 -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여 자동차, 트럭, 농업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표현 /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되어 있어 쌀 · 소고기 추가개방은 없고, 검역 절차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있었다고 부연 설명(김연주 2025.8.1.; 김태준 2025.8.4.)
 - (에너지) 4년간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원) 규모 구매
 -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상한 폐지

5. 여타 국가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 (미국-영국 협상) 미국의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시장 접근 보장 / 영국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시장 접근 보장 및 미국산 제품 구매 등

- (경과)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최초로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5.8)
 - 트럼프 대통령,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6.17)
- (상호관세) 영국에 부과된 기본관세율 10% 유지
- (품목관세)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25%* /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10% (27.5% → 10%)
저율관세 할당(TRQ) 10만 대 제공 / 의약품 관련 협의 지속
 - * 단, 특정 조건 만족 시 美 상무장관이 관세할당(TRQ) 설정 / 지속 협의
 -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품목관세 부과 시 영국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하기로 합의(英 총리실 설명)
 - (영국산 전략물품) 영국산 항공우주부품 무관세를 적용하여 고품질 영국 우주 부품에 대한 미국 항공우주 제조사들의 우선 접근권 확보
- 시장 접근 및 미국산 구매 확대
 - (농업) 영국은 농산품 시장 접근 기회 확대*
 - *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에탄올, 과일, 채소, 사료, 화학제품 등에 대한 영국의 시장 장벽을 제거하여 50억 달러 규모 수출 기회를 확보했다고 발표
 - (미국산 구매) 영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항공기 구매
- (경제안보) 제3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협력 강화

■ 미국-인도네시아 협상

- (경과) 양국은 관세 협상 합의 발표(7.16)
 - 백악관은 상호 무역 협정의 틀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7.22) / 협정의 최종 합의 및 서명 발효를 위한 절차 진행 예정
- (상호관세)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부과된 상호관세 19%로 인하(32% → 19%)
 -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공산품, 식품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을 약 99% 철폐 예정
- (미국산 구매 등)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항공기(32억 달러), 농산물(대두, 밀 등 45억 달러), 에너지 제품(LPG, 원유 등 150억 달러) 구매하는 상업 거래에 주목
 - (비관세 장벽)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농산물, 디지털 무역, 서비스 및 투자 등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
 - (무역기준) 인도네시아는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기준 채택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 약속 등

- (경제안보) 양국은 여타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출통제, 투자 안보, 관세 회피 방지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 인도네시아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용 상품의 미국 수출에 대한 제한 철폐 예정
 - 환적 상품 대상 관세 추가 부과

■ 미국-베트남 협상

- (경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미-베트남 무역 합의 발표(7.2) / '상호관세 추가조정 행정명령' 발표(7.31.) 이후 베트남 측 협상 경과 발표(8.1)
 - 양국 간 공동성명은 공개되지 않았고, 협상 내용은 주로 미국 측에서 발표
- (상호관세) 미국은 베트남에 부과된 상호관세 20%로 인하(46% → 20%)
 - 아울러, 중국 등에서의 환적품에 대해서는 40%
- (미국의 수출) 미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수출품은 무관세*
 - * 미국 측 발표 내용으로, 베트남 측 발표는 상호관세 인하는 언급하면서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에 대해서는 未 언급

■ 미국-필리핀 협상

- (경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미-베트남 무역 합의 발표(7.22) / 필리핀 측 공식 발표 별무
- (상호관세) 미국은 필리핀에 부과된 상호관세 19%로 인하*(20% → 19%)
 - * 최초 발표에는 17%였으나 서한을 통해 20%로 인상, 합의를 통해 19%로 인하
- (미국의 수출) 자동차, 농산물, 의료품 등 미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수출품은 무관세

6. 분석 및 평가

-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WTO, FTA 등 국제제도에 기반했던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 재편 가속화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자유무역 원칙에 근거했던 기존의 판을 뒤집고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판을 설계하기 위한 시도*
 - * USTR Greer 대표는 언론 기고문에서 기존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가 시작되었다고 주장(Greer 2025.8.7.)
 - 세계 경제의 구조적 조건이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대응 필요
 - 향후 WTO, FTA를 규율하는 국제통상법 체계와 미국 국내법(301조, 232조 등) 및 대통령 비상권한 (IEEPA)에 기초한 무역 합의 간의 정치적·법적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주목 필요

■ (경제안보) 이번 관세 협상에서 경제안보 요소로 미국은 ▲전략적 취약성 완화(전략산업 제조업 경쟁력 강화, 취약 품목 확보 등) ▲경쟁국 견제(우회 수출 방지 등) 등을 고려

- (미국의 요구) 현재까지 체결된 무역 합의를 통해 볼 때, 미국은 전반적으로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및 대규모 對美 투자 ▲미국의 취약 품목 확보 ▲미국산 물품 구매 ▲미국 수출에 대한 시장 개방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

- 미국은 대규모 소비 시장 보유라는 강점을 지렛대 삼아 상대방을 압박하여 협상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노력

- (전략적 취약성 보완) ▲반도체, 조선 등 전략 부문에서의 제조역량 약화 ▲핵심광물 등 전략 품목의 대외 공급망 의존 등은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인바, 미국은 이러한 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및 공급망 재편(reshape supply chain) 추진*

* USTR Greer 대표는 지난 수십년의 초세계화로 경쟁국들은 이득을 챙긴 반면, 미국은 산업 기반을 상실하고 공급망을 경쟁국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Greer 2025.8.7.) / Bessent 재무장관도 2000년 초반 중국이 세계 무역에 편입되며 중국 충격이 발생했고, 이번 관세 정책은 이러한 충격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MSNBC 인터뷰, 2025.8.7.)

- (대규모 투자 유치)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반도체, 조선 등 전략 분야에 대해 동맹·우방국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 / 협상 상대방은 이러한 미국의 취약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공동의 이해가 합치하는 지점 모색 노력*

* 예컨대,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의 취약 분야인 조선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내용을 담은 MASGA 프로젝트를 미국에 제안

- (리쇼어링) 한편, 미국은 일련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는 않고 있으며, 관세 부과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된다고 지속 강조 중* /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reinvigorate manufacturing)에 주력

*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도 미국에 생산설비 건설을 약속했거나 생산 설비 건설을 진행 중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취약 품목 확보)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면제하거나 최소화 /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핵심광물 對美 수출통제 철폐에 합의하여 취약 품목 확보에 주력

- (무역적자 해소)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 및 공정 무역 환경 확립이라는 기본 목표하에 미국산 물품 구매 및 시장 개방을 상대방에게 요구 / 이는 WTO, FTA 등 국제제도에 기반한 다자주의적 통상질서가 미국에 불공정하게 작용했다는 미국의 독특한 시각에 기인한 것

- (경쟁국 견제) ▲제3국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 공급과잉,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 ▲제3국의 우회 수출 및 관세 회피 방지 등 내용도 이번에 발표된 여러 관세 협상 내용에 포함

- (비시장 관행 대응 등) 비시장 정책, 불공정 관행 공동 대응 등 경제안보 협력 내용이 영국, EU,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의 협상 내용에 포함 / 다만, 일본, 한국 등과의 합의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상황
- (우회 수출 방지) 미국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환적 상품 대상 징벌적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 ‘상호관세 추가조정 행정명령’에 환적 조항을 포함하여 해당 조항이 모든 국가에 적용됨을 발표

■ (관세 협상의 패턴)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압박하고, 전형적인 무역 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협상 진행

● (미국의 지렛대) 미국은 수요처로서의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는 강점을 협상 지렛대로 적극 활용*

* USTR Greer 대표는 언론 기고문에서 미국이라는 수익성 좋은 시장에 재화를 팔 수 있는 것은 특권이자 당근이며, 따라서 관세는 매서운 채찍(formidable stick)이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Greer 2025.8.7.)

- 관세를 부과하여 여타국의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관세를 일정 부분 낮춰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일부만 허용하는 방식의 협상 진행
- 한편, 對美 수출 시장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양자 협상을 벌이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 / 상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여타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 결과를 도출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

● (미국의 협상 방식)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형적인 외교 관행 및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협상

- 정부 기관, 다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이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을 합의된 문구로 문서화하는 전형적인 무역 협상은 장기간 소요
-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달리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적용 시한을 사전에 설정해두어 상대방을 압박하고, 의사결정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협상 진행 / 그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호 이해를 조율하는 과정은 간소화
- 美 재무장관 Bessent, 상무장관 Lutnick 등도 관세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종적인 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을 주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관찰

■ (미국 국내정치) 이번 관세 협상은 미국 국내정치와 밀접하게 연계

● (국내 제약)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국내적으로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사법 쟁점*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

* 미국 관세정책을 둘러싼 국내 정치·사법적 쟁점 관련해서는 既발간 <경제안보리뷰> 25-10호 참조(최용호 2025.5.23.)

- 국내정치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청중에게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신호를 지속 발산할 유인이 있음을 이해 필요

- 미국이 내놓고 있는 협상 과정 및 결과와 관련된 메시지*들에 국내정치적 지지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요소들이 반영

* 예컨대,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능력을 통해 역대 대통령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강조 / 협상 결과 발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대규모 對美 투자(이익 미국 귀속)를 끌어냈다는 점 강조

■ **(불분명한 내용과 대화 지속) 이번에 발표된 주요국의 상호관세 협상 내용에 불분명한 요소 포함 ⇒ 향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이견 조율 등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무 협의 등 관련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불분명한 요소 포함) ▲**측박한 관세 유예 시점을 감안, 공통의 합의문 없이 협상 결과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경우가 다수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보다 정치적 합의에 가까운 결과물을 우선 발표한 점 등이 이번에 체결된 대부분의 관세 협상의 특징

- 협상 기한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상대방의 양보 확보 등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가시적 결과가 우선 필요했던바, 협상의 전반적인 틀과 방향성에 대한 합의 우선시

- 일본 등 협상 상대국도 ▲양보를 최소화하면서 관세 시행 시점 도래 전 관세 인하 확보 ▲미래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필요성 ▲국내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정치적 합의 우선시*

* EU는 정치적 합의를 우선 발표하고 회원국의 승인을 위해 추후 합의 내용을 미국과 공동으로 문서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고, 일본은 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 / 미국-인도네시아 협상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협상을 조기에 체결한 미국-영국 경우에도 합의문 공개

● **(국가 간 이견) 상기 이유로 각 국가는 자국의 관점에서 협상 결과를 해석하고 각각 발표한바, 향후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견이 나타날 수 있고, 향후 국가들의 이해를 조정해 나가는 후속 협의 과정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

* 법적 구속력이 약한 모호한 협상은 협상 체결 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이행 과정에서 추가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

- (관세 수준) 합의된 관세율 적용 과정에서 해석 차이 발생 가능

관세 수준 관련 쟁점

- (미국-필리핀, 베트남)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미국산 물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여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이에 대한 필리핀 및 베트남 측의 공식적인 발표가 현재 없는 상황
- (미국-일본) 일본은 15% 상호관세를 기존 부과되던 MFN 관세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 (즉, MFN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5% 미만 품목에는 15%가 적용되어 궁극적으로 15%의 관세만 부과)
 - 그러나 미국 발표 ‘상호관세 추가조정 행정명령’(2025.7.31.) 문안 상 15% 상호관세가 추가 종가세의 형태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 여지(이 경우, 기존 MFN 관세율에 상호관세율 15%p가 더해지는 형태로 관세 부과)
 - 미국은 동 행정명령에서 EU에 대해서는 일본과 달리 기존 관세율과 총합산하여 15% 관세만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발표
 - 이러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일본 협상단은 다시 급하게 미국 방문(변회 2025.8.7.)
- (품목관세)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관세에 대해 미국이 합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 현재까지 (2025.8.8.) 발표하지 않은 상황
 - 자동차 등 품목별 232조 관세율 적용에도 MFN 관세 추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 가능
 - 특정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합의도 어떻게 적용될지 주의 필요

- (미국산 구매 및 시장개방) 미국산 구매라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매 범위와 수준에 대한 해석 차이 발생 가능성

미국산 구매 및 시장 개방 관련 쟁점

- (미국-EU) 미국은 EU가 상당한 수준의 방산물자를 구매한다고 발표 / EU의 발표 내용에는 이런 내용 未 포함
 - 아울러 EU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품목 범위도 후속 협상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일본) 미국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늘리고, 항공기 및 방산물자도 대량 구입할 것이라고 발표 / 일본은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미국 농산물 수입 비중을 늘릴 계획이며, 항공기 및 방산물자도 기존 구매 계획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

- (對美 투자) 對美 투자 총규모 수치에는 협상 당사자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수렴* / 투자 방식, 투자 의사결정 주체, 투자이익의 배분 등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 표출

*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투자 규모 수치가 어떻게 적용될지 이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비관세 장벽) 對美 시장 접근 강화 요소에 대해서도 협상 당사자들 간 해석 차이 존재

비관세 장벽 완화 관련 쟁점

- 대부분 국가들이 위생검역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검토 등 관련해서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식으로 미국과 원칙 차원에서 합의
 - 비관세 장벽 완화 관련 구체적 내용은 추가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
- (미국-EU) 미국은 EU가 망사용료 철폐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 완화에 합의했다고 발표 / EU의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합의 내용 未 포함

- (우회 수출 방지) 환적에 대해 4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상호관세 추가조정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 환적의 정의와 적용 기준 등 관련 규정 현재 불분명

별지1 미국-일본 무역 합의 주요 내용 정리

	미국 입장 (미 백악관 Fact Sheet 발표(7.23))	일본 입장 (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일본어 자료 게시(7.25))
상호관세	15%	15%(MFN 관세포함)
품목관세	백악관 발표에 미포함 (구두 설명 : 자동차 관세 15% /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관세 15%(MFN 관세포함) / 반도체나 의약품 등 주요 품목별 관세 조치시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약
투자펀드 규모	5,500억불 투자	日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용자·용자보증 (구두 설명 : 일본측 출자는 1-2% 수준)
투자펀드 사용처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전략 분야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의약품, ▲조선)	9개 분야 (미측 언급 5개 분야 + ▲항공, ▲철강, ▲자동차, ▲AI·양자)
투자 이익	미국이 투자이익 90% 보유	투자 리스크 및 기여도를 반영하여 1:9로 배분
쌀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 (미국쌀 수입량 75% ↑)	최소시장접근 제도 내에서 일본 국내의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쌀 조달을 확보 (구두 설명 : 추가 쌀시장 개방은 없음 / 일본이 매년 수입하는 77만톤 중 미국쌀 구매 비중만 향상)
미국산 구매	80억불 규모 농산물 추가 구매 보잉기 100대 포함 미국산 항공기 구매	미국 농산물, 반도체, 항공기 등 미국 제품 구매 확대
알래스카 LNG	미일 양국은 장기구매계약 검토중(explori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한 검토
자동차	미국 자동차에 대한 규제 철폐	미국 제조 승용차에 대한 추가 시험 없이 수입 / 청정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운용을 적절히 재검토
방산물자	매년 수십억불 규모 추가 방산물자 구매	서면 자료 미포함 (구두 설명 : 기결정된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미국산 방산물자 구매 확대)
합의 사항 이행 방법	(구두설명) 분기별로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Bessent 재무장관 7.23.)	(구두 설명) 일미 합의를 어떻게 실시해나갈지 어떻게 이행을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 별무

별지2 미국-EU 무역 합의 주요 내용 정리

	미국 입장 (미 백악관 Fact Sheet 발표(7.28))	EU 입장 (공식 보도자료 배포(7.29))
상호관세	15%	8.1부터 대다수의 EU 수출품에 15% 적용 (MFN 관세율 포함)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관련 15% 관세 부과	8.1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15% 적용 / 의약품, 반도체 관련 추가관세 부과시 15% 적용
철강	철강·알루미늄·구리에 50% 부과 (구두 설명) 철강, 알루미늄 등도 협상 대상이 될 것 (Lutnick 상무장관 7.29)	EU 수출에 대해 과거 수준의 관세 할당량(TRQ)을 설정하고, 관세 축소 예정
EU산 전략물품	(구두 설명) EU산 코르크 등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무관세로 수출 가능 (Lutnick 상무장관 7.29)	8.1부터 EU 항공기, 항공기 부품, 일부 화학물질, 특정복제약품, 천연자원에 대해 금년 1월 수준의 관세 부과
미국산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 ▲특정 상품에 대한 의미있는 쿼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잔여 저율 관세 철폐 ▲미국산 수산물(알래스카 명태, 태평양 연어, 새우 등) 시장 접근 확대 ▲미국산 농산물(대두유, 종자, 곡물, 견과류 등) 시장 접근 확대(75억 유로)
비관세 장벽	미국산 돼지고기, 유제품에 대한 위생인증 간소화 포함 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기준과 위생검역 조치 협력 ▲산업분야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확대 ▲EU의 규제주권과 소고기 및 가금류 등 EU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한 합의로 평가
대미투자	6,000억불 규모 신규 투자 (매년 진행중인 1,000억불 규모 투자에 추가)	2029년까지 6,000억불 규모 신규 투자
에너지	2028년까지 7,500억불 구매	향후 3년간 7,500억불 구매(LNG, 석유, 원자력 에너지)
방산물자	상당한 규모(significant amount)의 미국산 방산물자 구매	(보도자료에 미포함)
디지털	EU가 망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겠다고 확인 / 디지털 상품 무관세 유지	(보도자료에 미포함)
원산지	미-EU 양자합의의 혜택을 제3국이 받지 못하도록 원산지 협의 강화	(보도자료에 미포함)
경제안보	공급망 강화, 제3국의 비시장관행,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점검, 수출통제, 관세회피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강화, 제3국의 비시장관행,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점검, 수출통제 협력
상업적 합의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분야 상업적 합의 인정	400억 유로 규모의 AI 반도체 구매
합의 이행 방법	EU 구매 품목은 상당부분 방산품목일 가능성이 크며 일부 농산물 구매도 포함될 것/ 향후 이행 여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EU측 약속 미준수시 관세율 변동 가능(Bessent 재무장관 7.29.)	7.27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양측은 즉각적인 이행 사항을 이행한 후 양측 내부 절차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

참고문헌

- 강정미 (2025.8.1.). “한미 관세협상 타결…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대한민국 정책 주간지 <K-공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승희 (2025.8.1.). “관세전쟁 끝난 미국·일본, “문서 없는 합의는 해석의 지뢰밭””. 『한경매거진&북』.
- 김연주 (2025.8.1.). “트럼프 “농산물 완전 개방” 한국은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중앙일보』.
- 김태준 (2025.8.4.). “쌀 개방·투자펀드 통제권…한미, 협상 결과 계속 다른 말””. 『조선일보』.
- 류호 (2025.7.27.). “일본 “대미 투자액 중 출자 1~2%, 수익 90% 쥐도 손해 미미””. 『한국일보』.
- 변휘 (2025.8.7.). “문서에 없으니 ‘관세 대혼란’…일본차 17.5% 관세? 日 “15% 확인””. 『머니투데이』.
- 산업통상자원부 (2025.7.30.).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이종현·송복규 (2025.7.31.). “수익 90% 美 소유’ 발언 무슨 뜻일까…김용범도, 김정관도 ‘재투자’ 추정만”. 『조선비즈』.
- 일본 내각관방 (2025.7.25.). 米国の関税措置に関する日米協議：日米間の合意（概要）.
- 최용호 (2025.5.23.).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경제안보 Review』. 25-10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 European Commission (2025.7.29.). EU-US trade deal explained.
- Greer, Jamieson (2025.8.7.). Trump’s Trade Representative: Why We Remade the Global Order. The New York Times.
- White House (2025.5.5.). Fact Sheet: U.S.-UK Reach Historic Trade Deal.
- White House (2025.7.17.). Fact Sheet: 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U.S.-UK Economic Prosperity Deal.
- White House (2025.7.22.).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Indonesia Reach Historic Trade Deal.
- White House (2025.7.2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Unprecedented U.S.-Japan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 White House (2025.7.28.).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Reach Massive Trade Deal.
- White House (2025.7.3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Further Modifies the Reciprocal Tariff Rates.

저자 소개

최용호 | yhochoi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국제정치경제, 기술패권경쟁,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안보정책의 관계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일 기술패권경쟁과 미국의 경제적 대응: 민군겸용기술을 둘러싼 안보 논쟁과 통상마찰”(이승주 편. 2020, 『미중 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경제안보리뷰, 23-7호), “틱톡 규제 동향 분석: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연계 가능성”(경제안보리뷰 23-16호), “미중 조선·해운 경쟁: 잠재적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경제안보리뷰, 24-8호),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경제안보리뷰, 24-19호) 등이 있다.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선임전문관

1. 개요: 경제안보 관련 연구 보고서 검토 필요성

-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를 국가적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
 - 과거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자원(광물, 에너지, 데이터 등) 확보,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 핵심인프라 보호, 경제적 강압 대응 등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
- 각국이 경제안보 정책을 도입한 이후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본 보고서는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을 조사한 주요 보고서를 종합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이번 연구동향은 아래 표의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 중, 일, EU 사례를 정리

[경제안보 정책 관련 보고서 목록]

발간일	제목	저자 발행처	주요내용
2025. 6.	한국의 경제 안보와 국제협력 전략: 상호보완성의 전략적 활용	이승주 학술논문 Trade&Security	주요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통의 이익에 기반한 정책 동조화 가능 분야 분석
2025. 4.	Defining economic security through literature review	Natsuya Yuzue and Takashi Sekiyama 학술논문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경제안보의 개념을 주요국의 공식 보고서 및 학술 논문을 통해 검토하고, 가치, 위협, 수단 측면에서 분석
2025. 3.	Exploring Economic Security Toolkits: Key Insights from Eleven Countries	Maaik Okano-Heijmans, Floor Stoelinga, Tobias Koster 네덜란드 싱크탱크 Clingendael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11개 국가의 경제안보 정책의 특징과 주요 수단을 정리
2024. 9.	Economic security policies compared: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partners	Georgia Edmonstone 호주 시드니대 연구소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미국, 호주, 일본, EU, 영국,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국내(산업 지원, 민관 협력 등)와 대외(무역 및 투자 제한, 통상 협정, 개발 협력 등)로 구분하고, 유사입장국 공조 확대도 검토

발간일	제목	저자 발행처	주요내용
2024. 2.	Shields Up: How China, Europ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hape the World through Economic Security	Elvire Fabry, Nicolas Kohler-Suzuki, Pascal Lamy, Marco Sibona 유럽(프랑스 파리) 싱크탱크 Jacques Delors Institute	미국, 중국, 일본, EU의 경제안보 정책의 배경을 진단하고 정책을 증진, 보호, 파트너십으로 구분하여 분석

2. 경제안보의 정의와 범위

- 주요국들은 경제안보의 개념화를 회피하거나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외교안보 및 경제 정책 등 각국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경제안보를 다르게 접근
 - 미국은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기조 하에 국가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경제를 통합하고 있으며,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중국과의 경쟁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기술 우위 유지 및 자국 산업 기반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중국은 경제안보를 체제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부분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술 자립과 핵심 산업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체제 보호를 핵심 목표로 설정
 - ※ 중국은 2015년 국가안전법 제2조에 따라 경제안보를 경제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가 주요 이익을 위협과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상태와 능력으로 정의
 - 일본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경험을 계기로 경제안보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하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불가결성(strategic indispensability)” 확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 점유를 중요 목표로 설정
 - ※ 일본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경제안보를 경제적 조치를 통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 경제적 번영 등의 국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에 초점을 둔 경제적 통치술 (economic statecraft)에 근접한 정의
 - EU는 27개국 회원국의 합의를 기반하는 해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 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한 사례이며,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크링(de-risking)을 기조로 삼아 개방된 단일시장의 이점을 활용하고 공급망, 핵심 인프라, 기술 보안, 경제적 강압이라는 4대 경제안보 위협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법 채택
- 다만 공통적으로 생존, 주권 독립, 경제적 번영 등을 경제안보의 핵심 가치로 삼고, 핵심 품목의 공급망 단절, 첨단기술 유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인프라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위협으로 식별하고 대응

- 경제안보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가치(values) ▲그 가치에 대한 위협(threat)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means)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분석 가능(Yuzue and Sekiyama, 2025)

- 미국, EU, 일본의 전략서에 나타난 가치, 위협 인식, 대응 수단은 아래 표 참고

[미국, EU, 일본의 공식문서 상 경제안보 정의]

문서	가치	위협	수단
미국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 (p.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넓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경제적 경쟁 (p.17) • 국내 경제 활성화 •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경제 관계 촉진 • 연구, 기술, 발명 및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 혁신 기반의 촉진 및 보호 • 에너지 우위 확보 (p.18-23)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	자유롭고 열린, 번영하는 안전한 국제 질서 (p.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의 경쟁 • 러시아의 위협 •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 불안정성 등 공통된 도전과제 (p.12-13) • 전략적 경쟁국을 압도(미세전자 공학, 첨단 컴퓨팅, 바이오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첨단 통신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 •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행동 촉진 • 기술, 사이버 보안, 무역 및 경제 분야의 규칙 형성 (p.11)
일본	국가안보전략서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 (p.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수단을 통한 다양한 위협 (p.30) • 공급망 회복력 강화 • 핵심 인프라 보호 • 데이터 및 정보 보호 • 기술 육성 및 보존 • 경제적 강압 대응 (p.30-31)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복잡성이 증가한 국제 상황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안보 확보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경제적 활동 (제1조) • 특정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 • 특정 핵심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특정 핵심 기술의 개발 지원 (제1조)

	문서	가치	위협	수단
EU	2023년 경제안보전략 공동 통신문**	번영, 주권 및 안전 (p.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회복력 • 핵심 인프라의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 기술 보안 기술 유출 • 경제적 의존성의 무기화 또는 경제적 강압 (p.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경쟁력 강화 투자 • 공급망 다각화 • 경제적 강압 대응 • 민감한 신기술 유출 방지 (p.4)

자료: Yuzue and Sekiyama (2025, p. 3)

*원문은 일본 경제안보추진법의 공식 영문 명칭인 Act on the Promotion of Ensur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Economic Measures로 표현

**공동 커뮤니케이션(Joint Communication)은 유럽집행위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공동 발표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U의 향후 정책 수립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 또한 경제안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의약품 공급 문제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기적 정책과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으로도 구분

- 단기적 정책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 등에 따른 즉각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반응적인 조치를 의미하고, 기업의 무역 및 투자 네트워크에 대한 개입이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접근 필요
- 장기적 정책은 지정학적 배경을* 두고 국익을 위해 경제적 기반을 창출시키는 일관된 조치이며, 국내 혁신 역량 강화, 이중용도 핵심기술 투자,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능력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접근, 수입원료 조달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포함

* 냉전 시기(미-소 양극 질서)에 GATT의 MFN 체계는 미국의 동맹 및 제3세계 국가에 우선 집중되었으며, 탈냉전 시기(미 단극 질서)에는 전 세계가 통합된 시장으로 발전

3.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도구는 ▲진흥(promotion) ▲보호(protection)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분류 가능* ※ 미, 중, 일, EU의 경제안보 정책 분류는 아래 표 참고

* 진흥은 국내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보호는 대외적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파트너십은 전략적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다변화(프렌즈쇼어링 등) 정책을 의미(Fabry et al. 2024, p.5)

- 미국은 기술 우위 유지, 중국 부상 견제, 핵심 산업의 국내 기반 강화를 위해 ▲공세적인 산업정책 ▲강력한 수출 통제 및 투자 심사 ▲동맹과의 협력 등을 추진

-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냉전시기 정책을 재활용하고,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자국 내 첨단 산업 생산을 촉진하는 등 공세적 정책 추진

※ 최근 미 의회는 예산조정법안(OBBBA)를 통해 첨단 제조 생산 등 세액 공제 혜택 수준 조정, 수혜 요건 명확화, 반도체 세액 공제 혜택 강화 등도 추진(경제안보리뷰 25-13호 참고) /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 및 투자정책으로 동맹의 대미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 및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강화 추진

● 중국은 체제 안정과 총체적 국가안보관 기조 아래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면서 ▲기술 혁신 및 자립 달성 ▲핵심 산업에 대한 통제력 강화 ▲인프라 및 통상 협력 등을 추진

- 쌍순환 전략, 중국제조 2025, 제조업 챔피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촉진 및 전략 산업을 육성하며, 수출통제법, 외국인 투자 안전 심사제, 반외국체재법, 반간첩법, 데이터 3법(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핵심 산업을 보호

● 일본은 공급망 강화, 핵심 기술의 우위 확보 및 보호를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수출통제 강화 ▲CPTPP를 통한 해외 시장 접근성 확보 등을 추진

-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 상 경제안보 목표 이행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고 진흥과 보호(특히 비공개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품목에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 추가 및 기술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대화 제도도 시행

*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핵심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전략적 불가결성 확보), 특허 비공개 등 4대 축 설정

● EU는 개방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면서 ▲산업 정책 도입 ▲일방주의 대항 조치 마련 ▲계속적인 자유 무역 협정 체결 등을 추진

- EU는 경제안보전략을 통해 처음으로 진흥, 보호, 파트너십이라는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제조달규정(IPI), 역외보조금규정(FSR), 강압대응조치(ACI)를 수립

[미국, 중국, 일본, EU의 경제안보 정책 수단의 예시]

	진흥	보호	파트너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 2022년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 미과학재단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설립 •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2025년 OBBBA • 공급망 관련 행정명령 다수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 및 투자정책, 에너지 및 광물 관련 행정 명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 외국인 및 해외 투자심사 (2018년 FIRMMMA 입법 및 CFIUS 권한 확대, 재무부 투자안보 프로그램 신설) • 수출통제 확대(FDPR, Entity List 활용 및 2018년 ECRA 입법 및 상무부 BIS 권한 강화) • 사이버안보 및 인프라 보호(2018년 국토안보부 산하 CISA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ad, AUKUS • 글로벌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 (PGII, 블루닷 네트워크) •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진흥	보호	파트너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순환 전략 • 중국제조 2025 • 중국표준 2035 • 수직계열화(예.원자재-배터리-전기차 공급망 내재화) •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 희토류 정제 분야 공고화를 위한 산업 구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및 해외 투자 심사 • 이중용도품목(핵심광물 및 희토류 포함) 및 핵심신기술 관련 수출통제법 • 외국법 대항조치 (반외국제재법, 반간첩법) • 데이터 3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BRI) • 아시아개발은행 • RCEP • 무제한적인 중-러 우호 관계 • 중국-아세안 FTA 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 등 재활용 계획 및 연구 기금 (METI) • 핵심 기술 개발(전략적 불가결성 달성) • 차세대반도체 개발 사업(Rapid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2020년 외국인 무역법 개정) • 국가안보 목적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 • 핵심 인프라 보호 •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미-네-일 반도체 장비 통제 등) • 민간인 비밀정보 적격성 평가 제도 • 기술관리 강화 목적 민관대화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ad • CPTPP, RCEP • 공급망회복력 이니셔티브(SCRI) • IPEF • G7 경제적 강압 대응 플랫폼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딜, NextGen EU • EU 산업 전략과 관련 법 제정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 국가보조금 규칙 완화 • 넷제로산업법 • 전략기술플랫폼(S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및 해외투자 심사 추진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 핵심기술 관련 위험 평가 • 국제조달규정(IPI) • 역외보조금규정(FSR) • 강압대응조치(ACI) • 사이버보호 및 핵심 인프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일본(2019), EU-뉴질랜드(2022), EU-칠레(2023) 무역 협정 체결 • TTC • 글로벌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 PGII

자료: Fabry et al.(2024, p. 3)을 토대로 저자 추가 조사

■ 이렇듯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진흥, 보호, 파트너십**이라는 구성 요소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지만,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전략을 구성하는 정책의 조합과 초점에서 차별성도 존재

- 이러한 차별성은 위협 인식 및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과 관련이 있으며, 미중 전략 경쟁 등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영향에 대한 차이점, 중국에 대한 의존도 및 경제적 강압 평가에 대한 개별 국가의 입장과의 관련(이승주 2025, p.87)

■ 한편 주요국들은 거버넌스 개편 및 경제안보 전략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도 추진

- 일본은 총리 직속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설치하고,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을 두어 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 경제산업성은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하고, 민간 전문가에게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적격성 평가(security clearance)’ 제도를 도입

- 프랑스는 경제재정부 산하 기업총국에 전략정보 및 경제안보국(SISSE)이라는 경제안보 정보 분석기관을 설립하여 전략적 자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Okano-Heijmans et al. 2025, p.53)
- 프랑스 기업의 경우 민간 정보 제출 요구 시 이를 의무적으로 SISSE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SISSE는 해당 기업과 관련 부처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
- 핀란드는 공급망 안보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비상공급기구(NESA)를 설립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체계적인 비축 시스템을 마련(Okano-Heijmans et al. 2025, p.58-59)
- 1992년 공급 안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략적 비축을 의무화하고, NESA와 경제고용부가 총괄 조정하되 기업들이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산업 분야별 위원회(주요 기업, 기관, 정부 대표 참여)에서 전반적 목표를 설정하되, 기업이 실무를 담당

4. 결론 및 시사점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비교 연구한 보고서들은 경제안보 전략이 비슷한 정책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순서와 비중을 두면서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
- 경제안보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며 각국의 경제 규모와 대외 의존도, 국내적 이익, 외교전략적 이익에 따라 차별화되고, 이는 경제안보 전략 수립 시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을 시사
 - 경제안보 개념의 모호성은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위협(공급망 교란, 기술 경쟁, 인프라 공격, 경제적 압박 등)에 따라 정책 범위의 확장 및 축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념적 혼란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어렵게하고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등 오용의 가능성도 존재
 - 경제안보 정책은 안보 상의 목적으로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안보 정책의 대상과 주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위협 요소를 구체화할 필요성 존재
- 대외 의존도 측면에서 한국은 앞서 조사한 주요국들과 대비하여 2배 이상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안보 디리스크 관점에서 주요국과 차별화되는 한국의 국익에 알맞은 전략 및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2024년 기준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입 비중)로 볼 때, 한국은 약 90% 수준으로 미국(25%), 중국(37%), 일본(45%), EU 역외 무역(2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수성 반영 필요(한국은행 국민계정, World Bank, Eurostat 자료)

- 소수 국가와 소수 품목에 집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 집중도(HHI) 측면에서도 2024년 한국은 중국(19.5%), 미국(18.7%), EU(10%)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품목도 집중되어 있어, 향후 다변화를 수출, 수입,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인 대안 모색 및 새로운 품목 창출을 위한 혁신 가속화도 필요(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미국, 중국, 일본, EU의 경제안보 정책의 특징 비교]

	핵심목표	관련 문서 및 정책 기초	정책 특징
미국	글로벌 패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전략서 • 미국 우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와 직결(경제안보는 국가안보) • 강력한 산업정책 및 수출통제
중국	체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체적 국가안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제 안정이 최우선 • 국가 주도 기술 자립
일본	자율성, 불가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전략적 불가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화를 통한 체계적 접근 • 민관의 전략적 소통 강조
EU	규칙 기반 개방 경제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경제안보전략 통신문 • 디리스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압대응(ACI) 등 대항조치 마련 • 회원국 간 조율 강조

자료: 저자 작성

■ 단기적으로는 민간 소통 제도를 통해 경제안보 정보(economic intelligence) 분석 및 위험 평가 역량 강화 필요

- 경제안보 정책의 실효성은 민간 부문의 참여에 달려 있으며, 기업의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정보를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파하는 정보 분석 역량 확보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 주요국 모범 사례(핀란드 NESAs, 프랑스 SISSE, 일본 민간대화 제도 등) 참고 필요

■ 동맹 및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전략 마련 필요

- 완전한 자급자족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무역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경제적 번영이라는 경제안보의 목표와 상충한다는 문제점을 지니며, 오히려 동맹 및 파트너십을 활용하면서 다변화 추구,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국익에 부합하는 규칙 설정 노력 필요
 - 유사입장국들은 정부 간 그리고 민간 부문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정보 공유 및 모범 관행 등을 공유해가면서 정책 공조 및 협력 심화 필요
-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대전환기에 국제협력을 이어가고 양다자 협력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요국 정책의 영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한국 경제안보 정책 목표의 정기적 재평가 필요

저자 소개

이재원 | jaewonlee@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미중 경쟁, 기술 동맹,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중 경쟁 시기의 동맹 기반 반도체 수출통제.” 『국제지역연구』 33, no.3 (2024),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한국과국제정치』 37, no.3 (2021)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7.16.~2025.8.6.)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中 해관총서, 6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 60.3% 증가 발표(7.14)

- (개요) 6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전월 대비 32% 증가(7,742톤) / 1~6월간 누적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1.9% 증가(32,569톤)
 - 특히, 對美 수출량은 39.1%, 對韓 수출량은 22.1% 증가
 - 단,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4.4일) 이후 수출통제 대상 희토류의 수출량은 대부분 지난해 대비 감소(영구자석 수출량 19% 감소)
- (평가) 6월 미-중 런던회담 이후, 그간 지연되었던 희토류 관련 수출허가 발급이 증가 추세인바, 中 정부의 수출 허가 동향 지속 관찰 필요

■ 상무부·과학기술부,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 개정 목록」 발표(7.15)

- (개요) 기존 목록('23.12월 발표) 대비 배터리 관련 기술(양극재 등) 신규 추가
 - ※ '25.1.3 개정안 발표 후 2.1까지 의견수렴 절차 진행, 7.15일 최종 목록 확정 발표
 - ▲1개 항목(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추가 ▲1개 항목(비철금속 야금 기술) 세부 사항 추가 및 수정**
 - ▲건축 기술 등 3개 항목 삭제
 - * ①배터리용 리튬인산철 제조 기술 ②배터리용 리튬망간철인산염 제조 기술 ③인산염 양극재 원재료 가공 기술 포함
 - ** 리튬 광물에서 ▲탄산리튬 생산 기술 ▲수산화리튬 생산 기술 등 기존 8개 항목에 5개 추가
- (평가)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 下, 관련 기술의 해외 유출 제한 목적으로 평가
 - 신규 추가 기술은 원자재 가공 및 정제 기술에 초점 / 일각에서는 中 정부의 미국과 EU의 배터리 원료 및 정제 역량 확대 견제 목적 제기
 - 단, 수출제한 기술도 상무부의 수출허가증 취득시 수출이 가능하므로, 목록 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은 추후 지속 관찰 필요

■ 中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전략 광물 밀수출 단속 회의 개최(7.19)

- (주요 내용) ▲전략광물 밀수출 현황 점검 ▲향후 추가 조치 구체화 등
 - (목적) ▲기존 밀수 단속 상황 점검 ▲특별 조치 강화 추진
 - (참여 기관) 상무부,公安부, 국가안전부, 해관총서, 최고인민법원 등

- (향후 계획) ▲단속 강도 강화 ▲전략광물 수출업무 지침 수립 및 발표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합동 단속 조정 센터 설립 방안 검토 등

● (평가) 이중용도 수출통제 정책 시행 관련 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추세

-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강화 조치가 제3국을 통한 美 기업들의 중국산 광물 수입 방지목적으로 평가

※ 최근 언론은 미국 기업들의 제3국을 통한 중국산 핵심 광물 수입 사례 등 보도(Reuters, 7.9)

- 中 정부는 전략광물 밀수출 단속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바, 향후 추가 회의 개최*를 통한 관련 조치 강화 및 구체화 가능성 다대

*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사무국은 지난 5월에도 광동성 선전에서 동일 명칭의 회의 개최

■ **트럼프 대통령, 한미 무역 합의 타결 발표(7.30)**

● 트럼프 대통령은 7.30일 Truth Social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전면적이고 완전한(Full and Complete) 무역 합의 타결 발표

《한미 무역 합의 주요 내용》

- (투자) 한국의 對美 3천 5백억불 투자
- (관세)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
- (구매) 한국은 1천억불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
- (기타) 반도체·의약품 관세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 **트럼프 대통령, 특정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 포고문 서명(7.30)**

● (주요 내용) ▲반가공 구리 제품 ▲구리 함량이 높은(copper-intensive) 파생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8.1부 시행)

- ▲반가공 구리 제품(동관, 동전선, 동봉, 동통 등) 및 파생 제품(동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에 대해 50% 관세 부과 ▲구리 원료(광석, 정광, 전기동 등) 및 폐구리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 및 상호관세 미적용

● (평가) 미국 내 구리 산업 지원(제조시설 투자 등) 목적의 관세 부과로 평가

※ 포고문은 구리를 항공기 등 방위시스템 및 산업 기반에 사용되는 안보에 필수 원자재로 정의

- 포고문은 향후 수입 현황에 따른 정제 구리 대상 보편관세 검토 권고*

* '27년 1월 1일부터 15%, 2028년 1월 1일부터 30%

- 한편, 관세 부과에 따른 관련 국내 업체*의 수출 감소 불가피(`24년 기준 對美 수출액 약 5억 9천만 달러 / 관세로 약 68%에 해당하는 품목에 영향 전망)

* 동관 및 동봉의 경우 이미 미국 내 생산 과잉에 따른 경쟁에 직면 / 동선 등은 전력망 수요 증가 추세이나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산 제품 대체 등으로 수출 물량 감소 가능(철강금속신문, 8.1).

■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대상 100% 관세 부과 발언(8.6)**

● **(주요 내용)** 트럼프 대통령,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 부과 언급

※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가 부과 대상”이며,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평가)** 반도체 관련 기업의 대미 투자 촉진 목적으로 평가

- 한편, 관세 부과 시기, 면제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바, 관련 동향 지속 관찰 필요

■ **EWS 공급망**

국가	일자	내용
중국	7.6.	[기술] 중국과학기술협회(CAST), 30대 전략과제 선정 : ▲10대 첨단 과학 문제 ▲10대 공정 기술 난제 ▲10대 산업 기술 문제 선정
	7.14.	[희토류] 해관총서, 6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 전년동기대비 60.3% 증가 발표 : 6월 희토류 수출량 7,742.2톤 / 1~6월간 누적 수출량 32,569.2톤
	7.14.	[기업결합] 시장총국, 美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Synopsys의 Ansys 지분인수 조건부 승인 결정 발표 : 미국의 EDA 수출통제 추가 조치 해제(7.2) 이후 기업결합 심사 재개(7.11) 및 합병 승인(7.14)
	7.15.	[수출통제] 상무부·과학기술부,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 개정 목록」 발표 : 2023.12월 개정 목록 대비 ▲1개 항목(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신규 ▲1개 항목(비철금속 야금 기술) 세부 사항 추가 및 수정 ▲건축 기술 등 3개 항목 삭제
	7.16.	[공급망] “투자 쓰촨(四川)” 국제공급망협력대회 개최(베이징)
	7.17.	[일대일로] 상반기 中 일대일로 투자 및 건설계약 역대 최대
	7.18.	[투자] 7개 부처,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장려 조치 발표
	7.18.	[희토류] 당국, 안보 문제를 이유로 자국 기업에 희토류 채굴 쿼터를 뒤늦게 비공개 통보 : 희토류 통제 강화 신호로 분석
	7.19.	[투자] 상무부, ‘25년 상반기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 발표 : 전년동기대비 15.2% 감소한 4,232억 위안 기록
	7.19.	[광물] 국가수출통제조정기구, 전략 광물 밀수출 단속 특별조치 추진회의 개최
	7.24.	[정상회담] 제25차 중국-EU 정상회담 개최
	8.3.	[광물] WSJ, 중국이 방위산업 용도 희귀금속 및 광물 공급 차단 중이라 보도

국가	일자	내용
미국	7.15.	[반도체] 젠슨황 Nvidia CEO, 美 행정부의 H2O 반도체 수출 허용 언급 : Lutnick 상무장관, H2O, 對中 수출 판매 허용 인정
	7.15.	[불공정무역] USTR, 무역법 301조에 따른 對브라질 공식 조사 착수 발표 : (조사 대상) ▲브 정부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PiX) 규제 및 외국 기업 배제 여부 ▲사법권의 자의성 및 국가 개입 통상 관행 ▲보조금 및 기술이전 강제 조건 등
	7.16.	[해저케이블] 연방통신위원회(FCC), 해저케이블에 중국 기술 사용 금지 추진계획 발표
	7.17	[관세] 상무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포함 중국산 활성 음극 물질(active anode material)에 대해 93.5% 반덤핑 관세 예비 부과 결정
	7.18.	[예산] 의회, 지출 취소 법안(Rescissions Act) 최종 통과 : ▲공영방송 지원(11억 불) ▲해외원조(78억 불) 등 既편성 예산 지출 취소
	7.18.	[암호화폐] 상원 통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GENIUS Act), 하원 통과 : Trump 대통령, 동 법안 서명
	7.18.	[보건] 행정부, WHO 국제보건규약 개정안 거부 공식 발표
	7.22.	[관세] Trump 대통령, 필리핀과의 무역 합의 타결 발표 : ▲(美) 필리핀에 19% 상호관세 적용* ▲(필) 美 제품에 무관세 시장 개방 등 * 4.2. 최초 상호관세율 17% → 7.9. 서한에서 20%로 상향 → 7.22. 정상회담 시 19%로 확정
	7.22.	[관세] Trump 대통령, 미-인니간 무역 합의 발표 : ▲(美) 인니에 19% 관세 부과 ▲(인니) 미국산 산업·기술·농산품에 대해 99%의 관세장벽 제거 및 항공기(32억불)·농산품(45억불)·에너지(150억불) 구매 등
	7.22.	[관세] Trump 대통령, 일본과의 무역 협정 타결 발표 : 日, ▲자동차, 트럭, 쌀 등 무역에 시장 개방 및 ▲미국에 15% 상호관세 지불
	7.22.	[제재] 행정부, 후티 반군 석유 밀수 및 제재 회피 네트워크 제재 발표
	7.22.	[쿼드] 상원, '쿼드 경제안보법안(Quad Economic Security Act, S.2380) 발의 : (주요 내용) 쿼드 내 경제안보 실무그룹 설립을 위한 쿼드 국가 간 협상 개시
	7.23.	[AI] 백악관, 미국의 AI 실행계획(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 (전략) ▲AI 혁신 가속화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선도
	7.23.	[비자] 하원,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PWKA) 발의
	7.27.	[관세] Trump 대통령, 美-EU 무역 협정 타결 발표 : (EU) ▲7,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 ▲6,000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 등 / (美) 자동차 및 모든 상품에 대한 對EU 관세 15%로 인하
	7.28.	[미중관계] Reuters 등 언론, 美中 스톡홀름 협상 시 기존 합의 90일 연장 목표 보도
	7.29.	[관세] Trump 대통령, 인도에 25% 관세 부과 예정 시사
	7.29.	[관세] Lutnick 상무장관, 향후 2주 내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예정 시사
	7.29.	[G20] Trump 대통령, 남아공 G20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 시사
	7.29.	[환경] 환경보호청(EPA), '온실가스 유해성 판정' 폐기 계획 발표 : 모든 경·중·대형 차량 및 엔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폐지 등
7.30.	[구리] Trump 대통령, 특정 구리 수입품*에 50% 관세 부과 포고문 서명 * ▲반가공 구리 제품 및 ▲구리 함량이 높은(copper-intensive) 제품	

국가	일자	내용
미국	7.30.	[관세] Trump 대통령, 인도에 25% 관세 및 추가 페널티 부과 발표
	7.30.	[관세] Trump 대통령, 브라질에 총 5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기존 10% 상호관세 + 추가 40% 관세 / 민간 항공기, 선철, 귀금속 등 브 주요 수출품은 면제
	7.30.	[관세] Trump 대통령, 모든 국가 대상 800미불 이하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적용 종료 행정명령 서명 : 8.29일부터 시행
	7.30.	[관세] Trump 대통령, 한미 무역 합의 타결 발표 : (韓) ▲3천5백억불 美 투자 ▲1천억불 규모 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 등 / (美) 한국에 15% 관세율 부과
	7.30.	[제재] 행정부, 이란 석유 무역 네트워크 대상 대규모 제재 발표
	7.31.	[관세]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 국가긴급사태 종료 내용 결의안 발의 계획 발표
	7.31.	[관세] 백악관, 상호관세 추가수정 행정명령 발표 : 각국의 대미 협상 결과 반영 및 상호 관세율 수정·확정
	7.31.	[관세] Trump 대통령, 對캐나다 관세 인상(25%→35%, 8.1.부터 즉시 발효) 행정명령 서명 : ▲USMCA 적용 상품 예외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상품에는 40% 관세 부과
	7.31.	[제재] 행정부, 이란 무인기 기술·장비 조달 가담자 대상 제재 발표
	7.31.	[관세] 미-멕시코 30% 관세 적용 90일 유예 합의
	8.1.	[관세] Trump 대통령, 스위스에 39% 관세 부과
	8.5.	[의약품] Trump 대통령, 내주 경 의약품 관세 발표 계획 언급
	8.5.	[관세] Trump 대통령, 對인도 관세(現 25%) 24시간 내 대폭 인상 예고
	8.5.	[반도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반도체 위치 추적 기능 개선 방안 모색
	일본	7.17.
7.23.		[관세] 일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 :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 15% 합의 체결
7.23.		[정상회담] 제30회 일-EU 정례 정상회담 개최(도쿄)
8.3.		[광물]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 자국 상사 소지쓰-미국 알루미늄 대기업 알코아 합작사 설립 추진 : 2026년부터 호주 갈륨 생산 추진
8.6.	[관세] 경제재생상, 美 상호관세 관련 합의 수정 요구 계획 발표	
대만	8.5.	[투자] 경제부장, 관세 협상을 위해 美에 4천억 달러 투자 의향 발표
EU	7.18.	[대러제재] 이사회, 제18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발표
	7.21.	[방산] 英에 ‘유럽 무기 공공조달’ 참가비 부과
	7.24.	[관세] 회원국, 930억 유로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30% 보복관세 부과 조치 찬성 : 8.7. 발효 예정 / 8.1.까지 미국과 협상 타결 시 동 조치 유예 예정
7.24.	[정상회담] 제25차 EU-중국 정상회담 개최	

국가	일자	내용
EU	7.27.	[관세] EU-미국 무역 합의 타결 발표 : (합의 세부 사항) ▲유럽산 수출품에 15% 관세 부과 ▲미국산 에너지 및 무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 등
	7.28.	[보조금]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기업결합 심층조사 개시 : UAE 석유가스 기업 ADNOC의 독일 화학 기업 Covestro 인수 관련 심층조사 개시
	7.29.	[R&D] 외교이사회, EU Horizon Europe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제외 논의
	8.5.	[관세] 집행위, 對美 보복관세 조치(당초 8.7.자 발효 예정) 6개월 유예 결정
캐나다	7.10.	[철강] 국제무역심판소, 한국·중국·터키·베트남산 철강 제품의 덤핑 가능성 및 중국 보조금 지원 의혹 제기
	7.16.	[철강] 총리, FTA 체결국 포함 모든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할당량(TRQ) 적용 조치 발표 : ▲6.27일부터 既시행 중인 비FTA체결국산 철강 수입품 TRQ 축소 ▲한국 등 FTA 체결국산 철강 수입품 TRQ 설정 등
독일	7.15.	[자동차] BMW, 중국 주행 기술 업체 모멘타와 파트너십 체결
	7.21.	[투자] 주요 기업 및 해외 대기업 총 61개*, 'Made for Germany' 투자 이니셔티브 발표 : 독일 내 설비 및 연구개발 등 투자에 2028년까지 6,310억 유로 투입 계획 * 지멘스, 도이체방크, SAP,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라인메탈, 엔비디아, 블랙록 등
	7.21.	[전기차] 메르츠 총리, EU 집행위가 검토 중인 법인차 전기차 의무화 방안 관련 반대 입장 표명
	7.21.	[협정] 연방내각,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EU 투자보호협정'에 대한 법률안 초안 승인
	7.30.	[기술] 연방내각, 「Hightech Agenda Deutschland」 채택 : (주요 내용) ▲6대 국가전략기술(①인공지능 ②양자 ③마이크로전자(반도체) ④바이오 ⑤에너지 ⑥탄소중립 모빌리티) 선정 ▲재정 투자 계획 및 거버넌스 등 수립
프랑스	7.18.	[인태] 외교부, 2025 프랑스 인도-태평양 전략 개정판 발표
튀르키예	7.16.	[반덤핑] 한국산 합성 필라멘트사 반덤핑 일몰재심 공고
브라질	7.11.	[반덤핑]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무역구제국(DECOM), 압연실리콘철강 반덤핑 일몰재심 판정 결과 관보 게재 : 한국·중국·대만·독일산 압연실리콘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 5년 연장 결정
칠레	7.31.	[구리] El Teniente 동광 붕괴사고 발생 : 규모 4.2의 지진으로 인해 국영동공사(Codelco) El Teniente 동광 내 붕괴사고 발생
호주	7.15.	[FTA] 외교통상부-中 상무부, 양국 간 FTA 협정 재검토 MOU 체결
	7.15.	[철강] 濠-中 양국, 철강 탈탄소화 정책대화* 신설 합의 * Policy Dialogue on Steel Decarbonisation
	7.24.	[수입] 농수산업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검토보고서 발표
	7.30.	[우주] 우주 민간기업 Gilmour Space Technologies社, 호주 최초 자체 개발 로켓 발사
베트남	8.1.	[관세] 산업무역부(MOIT), 베트남-미국 무역 협상 경과 발표 : 미국의 대베트남 상호관세 기존 46%→20% 인하 등
스리랑카	7.17.	[관세] 경제개발부 장관, 미국의 스리랑카發 수입품 80%(1,161개 품목) 대상 면세자격 부여 합의 발표
인도	7.4.	[조선] HD현대,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 코친 조선소와 장기 협력 MOU 체결

국가	일자	내용
인도	7.11.	[철강] 철강부, 수입 철강 원재료 및 중간재에 대한 BIS 인증 확대 적용 조치 한시적 면제 발표 : 7.15일 이전 선적 제품 면제 등
	7.24.	[협정] 인도-영국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체결
	7.31.	[투자] 아다니 그룹, 베트남에 최대 100억 달러 규모 투자 의지 표명
바레인	7.16.	[투자] Salman 왕세자, 170억 불 규모 신규 對美 투자 계획 발표
카자흐스탄	7.28.	[무역] 카자흐스탄-중국, 국경 세관서 '무인 화물트럭 통과' 사업 착수

■ 에너지

국가	일자	내용
중국	7.29.	[수력발전] 국무원 국유감독위, 수력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新 중앙기업(중국야장 그룹유한공사) 출범 발표 : 중국야장그룹, 야루짱부강 하류 수력발전 프로젝트 착공식 개최
미국	7.15.	[원자력] 웨스팅하우스, 2030년까지 미국 내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 건설 계획 발표
	7.16.	[원자력] 美-바레인 전략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NCMOU) 서명
	7.22.	[LNG] Trump 대통령, 알래스카産 LNG 개발 관련 일본과 조인트벤처 설립 계획 언급
캐나다	7.7.	[MOU] 앨버타-온타리오, 에너지 및 무역 분야 州간 협력 관련 MOU 체결
멕시코	7.10.	[석유] 멕시코 석유공사(PEMEX), 석유·천연가스 민관 합작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 총 80억 미불 민간 투자 유치 계획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호 (2025.1.10.)	분석	‘美 조선·해운 강화 법안(SHIPS for America Act)’ 분석 및 시사점	최용호
	현안	美 하원 중국특위 보고서로 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전망	황지현, 이재원
	연구동향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보고서	이재원
25-2호 (2025.1.24.)	분석	글로벌 전력인프라 수요 확대와 경제안보	임산호
	현안	美·中 과학기술협정(STA) 개정 동향 및 시사점	김단비
	연구동향	AI 경쟁 관련 전문가 기고문 주요 내용	김수연
25-3호 (2025.2.14.)	분석	美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의 경제안보적 시사점	유지영
	현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 배경과 경제안보적 가치	유아름
	연구동향	FA ‘양자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경쟁’ 주요 내용	안수린
25-4호 (2025.2.28.)	분석	美 에너지 우위(Energy Dominance)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현안	중국 인공지능(AI) 굴기와 전략적 함의	김수연
	연구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최용호
25-5호 (2025.3.14.)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 및 경제 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25-6호 (2025.3.28.)	분석	「미국 우선 투자정책」 분석 및 시사점	안수린
	현안	2025년 중국 양회 경제 분야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美 USTR 조선·해운 분야 301조 조치 제안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최용호
25-7호 (2025.4.11.)	연구동향	Merics, 美-EU의 對중국 정책 우선순위 제언 보고서 발간	임산호
	분석	글로벌 LNG 동향과 미국의 LNG 정책	유아름
	현안	美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4.2.)의 내용 및 평가	유지영
	연구동향	「미국의 AI 지배력과 전력 공급 병목 현상」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8호 (2025.4.25.)	분석	유럽방위백서 발표 동향 및 우리 방산업계 영향	임산호
	현안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행정명령: 주요 내용과 함의	이재원
	연구동향	「중국 이중용도 조선산업의 부상과 대응」	김단비
25-9호 (2025.5.09.)	분석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동향	황지현
	현안	미국 우주 기술보호협정(TSA) 체결 동향	김수연
	연구동향	「중국 성숙공정 반도체(foundational chips) 지배전략과 함의」	유아름
25-10호 (2025.5.23.)	분석	미국 상호·기본 관세 관련 국내 정치·법적 쟁점 분석	최용호
	현안	美 「AI 확산 규칙」 철회 및 AI 반도체 수출통제 동향	안수린
	연구동향	「예정된 분열?: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과 EU의 대응」	이재원
25-11호 (2025.6.13.)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주요국 대응 : 지경학적 파급효과와 경제안보적 함의	이재원
	현안	경제안보적 관점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동향 분석	임산호
	연구동향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평화와 재건을 위한 부실한 기반」	황지현
25-12호 (2025.6.27.)	분석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분석: 미·중 통상 협의 배경 및 시사점	김단비
	현안	2025 G7 정상회의의 경제안보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김수연
	연구동향	「수출통제: 미국과 인도의 우선순위 간 긴장 완화」	안수린
25-13호 (2025.7.11.)	분석	미국 2025년 예산조정법안(OBBBA)과 경제안보 :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지원 조항을 중심으로	최용호
	현안	중동 핵심 해협(호르무즈, باب엘만데브, 수에즈 운하) 경제안보 리스크와 대응방향	유아름
	연구동향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전략은 성공했는가?	임산호
25-14호 (2025.7.25.)	분석	미국의 중국산 드론(UAS) 규제 동향	안수린
	현안	중국 광물자원법 개정 동향	김단비
	연구동향	「핵연료주기 관리에 대한 미국의 역할」	황지현

「경제안보 Review」 2025년 발간 목록

발간호 (발간일)	구분	제목	저자명
25-15호 (2025.8.14.)	분석	미국의 방산·핵심광물 연계 경제안보 모델 분석: UAE, 사우디, 우크라이나, DR콩고	유아름
	현안	주요국의 對美 관세 협상 결과 분석: 경제안보 관점	최용호
	연구동향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재원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